



2017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학술좌담회

우리가 살고 싶은 나라

- 일시** 2017년 3월 23일(목) 오후 2시~5시
- 장소** 고려대 백주년기념관 지하1층 국제원격회의실
- 기획**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HK한국문화연구단
〈우리가 살고 싶은 나라〉 기획연구팀

학술좌담회 참석자 (가나다 순)

강대인

서울대 문과대와 켈른대 철학부(교육학)를 졸업했고, 재단법인 크리스찬아카데미 부원장과 연세대 대학원 겸임교수(정치외교학과)를 역임했다. 현재 대화문화아카데미 원장으로 있다.

시민사회를 기반으로 지식인, 여론지도자들 중심의 사회적 대화를 통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조사연구, 대화모임, 교육, 출판 등의 일을 해오고 있다. 최근에는 10여년의 공동작업의 성과로 『대화문화아카데미 2016 새헌법안』을 마련했다.

이남곡 (본명: 이계천)

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70년 농촌 지역 교사로 출발하여 8년 간 '교육실천연구회' 활동을 했으며, 1980년대 '새로운 인간, 새로운 사회, 새로운 문명'에 대해 사상 이념적으로 모색했다. 불교사회연구소 소장을 역임했으며, 2004년부터 현재까지 장수에 정착하여 인문운동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연찬문화연구소 이사장으로 있다.

저서에 『진보를 연찬하다』, 『논어-삶에서 실천하는 고전의 지혜』, 『합작과 연정은 시대정신이다』 등이 있다.

이부영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했으며, 동아일보 기자로 있다가 해직당했다.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대변인과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민통련) 사무처장,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상임의장을 역임했다. 그 이후 정계에 입문하여 통합민주당 부총재, 한나라당 원내총무, 부총재, 열린우리당 의장직을 맡았다. 14,15,16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현재 동북아평화연대 명예이사장 및 동아시아평화회의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다.

서로 『희망의 정치로 가는 길』, 『다시 서는 저 들판에서-이부영의 시대과제』 등이 있다.

정성현

서울대를 졸업한 뒤 40여 년 동안 가톨릭농민회 활동을 해왔으며, 우리밀살리기운동 본부장,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 상임집행위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한국dmz평화생명동산 이사장 및 남북강원도협력협회, 함께하는경청(敬聽) 이사장을 맡고 있다.

지속가능한 산업의 토대인 농업 농촌을 살리는 길,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책과 이를 위한 정치혁명과 교육개혁 실천 등에 특히 관심을 기울이고 활동하고 있다.

<우리가 살고 싶은 나라: 한겨레신문 연재글 모음>

차 레

1. 연재 서론: 대안적 질서 없는 이 시대, 길을 찾아서 (진태원) 2쪽
-2016년 1월 22일
2. 복지: '반복지의 덫'에 갇힌 한국사회...복지와 경제민주화는 '한몸' (고세훈) 5쪽
-2016년 2월 5일
3. 경제: 기성세대는 자식들에게 물어보라 (장하성) 8쪽
-2016년 2월 19일
4. 정치: 한국 예외주의를 넘어서 좌우 양 날개로 (손호철) 11쪽
-2016년 3월 11일
5. 사회: 사회를 복원할 것인가 재발명할 것인가 (서동진) 14쪽
-2016년 3월 25일
6. 한미 관계: 문제는 통치다! 제국과 위험 사이의 한국, 한국인 (정일준) 17쪽
-2016년 4월 8일
7. 한국 현대사: '사회력' 기반으로 '연성정치'가 이뤄지는 나라 (김동춘) 21쪽
-2016년 4월 29일
8. 도시: 도시의 앞날, '진보도시'의 조건은 무엇인가 (조명래) 25쪽
-2016년 5월 20일
9. 화쟁: 다투되 평화롭게 다투는 '화쟁적 성찰' (조성택) 27쪽
-2016년 6월 3일
10. 비정규직: 승자만이 아닌, 일하는 자 모두가 권리를 갖는 나라 (김혜진) 30쪽
-2016년 6월 17일
11. 환경: 지속가능하고 '좋은 삶'이 가능한 민주공화국 (하승수) 33쪽
-2016년 7월 8일
12. 지방: '지방'의 딜레마와 '지역감정'을 넘어서는 나라 (김용규) 36쪽
-2016년 7월 22일
13. 여성: 불의에 맞서는 '공통 감각' 가지는 나라 (류은숙) 39쪽
-2016년 8월 5일
14. 맷음말: 을의 민주주의를 위하여 (진태원) 42쪽
-2016년 8월 19일

1. 연재 서론: 대안적 질서 없는 이 시대, 길을 찾아서-인터레그넘의 시대

진태원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인문한국 연구교수)

영국의 사회학자 지그문트 바우만은 현재의 세계를 인터레그넘(interregnum)의 시대로 규정한 바 있다. 로마법에서 이 용어는 원래 지금까지 통치하던 왕이 사망했는데 아직 새로운 왕이 즉위하기 이전의 기간을 의미했다. 일종의 정권 이행기라는 뜻이다. 이 용어에 단순한 정권 이행기라는 뜻을 넘어 포괄적인 사회정치적 격변기라는 의미를 부여한 것은 이탈리아의 마르크스주의자였던 안토니오 그람시였다.

바우만 자신은 세계화 시대를 인터레그넘의 시대로 규정한다. 세계화는 영토·국민(또는 인구)·주권에 기반을 둔 국민국가 중심의 질서를 해체했는데, 우리는 아직 그 대안적 질서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시장과 자본의 권력이 오늘날 사회적·개인적인 삶에 막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국민국가의 정치적 제도 및 그것이 대표하는 국민의 주권적 힘은 이를 전혀 제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바우만과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한국인들 역시 인터레그넘의 시기, 곧 역사의 거대한 분수령을 맞고 있다. 1945년 해방될 무렵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고, 전쟁의 폐허와 빈곤의 공포에 시달리던 나라가 지난 70여 년 동안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으니, 지난 한국 현대사는 참으로 기적과 같은 역사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언론에서 크게 보도된 바 있듯이, 이러한 현대사의 성취가 무색하게도 최근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헬조선, 망한민국, 금수저, 흙수저 같은 혐오담론이 유행하고 있다. 이것은 집권당 대표가 일축하듯이, 일부 철없는 젊은이들이 그릇된 역사관으로 인해 갖게 된 잘못된 생각에 불과한 것인가?

사실 이러한 혐오담론은 대한민국의 암울한 현실에 대한 절망의 표현이다. 다음과 같은 지표들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1년 연속 자살율 1위, 노인빈곤율 1위, 의료비 증가율 1위, 저임금 근로자 비율 2위, 임금 불평등 비율 3위, 삶의 만족도 36개국 중 29위, 국민총생산(GDP) 대비 복지비율 최하위, 출산율 최하위... 이것은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2013년 국민행복정부를 표방하면서 출범한 박근혜 정부 하의 대한민국 이야기다. 이러한 지표들은 지난 70여 년 동안 우리나라 국민들이 피땀 흘려 이룩한 역사가 이제는 모두 수포로 돌아갈 위험에 처해 있지 않은가 하는 불안감을 자아낸다.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본다면, 이는 바로 지난 70년 역사의 이면이 아닌가? 곧 잘 먹고 잘 사는 것 하나만을 유일한 가치로 숭상해온 경제성장 제일주의의 필연적 결과가 아닌가? 실로 정치공동체라는 말이 무색하게도 지금까지 대한민국에는 먹고 사는 것 하나 말고는 공동의 가치라는 것이 존재한 적이 없다. 오직 나 하나, 우리 가족, 우리 집단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삼겨 왔을 뿐이다. 그리고 신자유주의 체제는 이러한 각자도생의 논리를 사회 전체로 확산시키고 있다.

더욱이 점차 증대하는 빈부격차, 인권과 시민권의 축소, 남북 관계의 악화에 더하여 점점 노골화되는 공안통치로 인해 우리는 이제 유신 시대로 되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자유와 평

등, 평화와 생명의 가치에 기반을 둔 민주주의적 공동체를 건설할 것인가라는 두 가지 선택지 사이에 직면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원장 조성택)은 지난해부터 ‘우리가 살고 싶은 나라’라는 주제 아래 기획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러한 화두는 대한민국이라는 정치공동체의 구성원인 우리가 추구해야 할 공동의 가치는 어떤 것이며, 이러한 가치에 기반을 둔 공공의 것(res publica)은 무엇인가에 관한 질문이다. 우리 사회의 다른 시민들과 더불어 이러한 물음을 던지고 그에 대한 답변을 탐색하기 위해 민족문화연구원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우리가 살고 싶은 나라 포럼’이라는 일련의 학술 강연을 시작했으며, 앞으로 워크숍, 학술대회, 시민 강좌 등을 통해 이 기획을 계속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 행사에서 이뤄진 논의를 바탕으로 한 ‘우리가 살고 싶은 나라’ 지면 연재에서는 한국의 대표적인 인문사회과학자들이 정치, 경제, 복지, 사회, 한미 관계, 교육, 사법, 인권 같은 분야에서 현재 한국 사회가 직면해 있는 심각한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해법을 모색할 예정이다.

첫 번째 필자인 고세훈 고려대 교수의 설명을 보면, 복지의 확충을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는 우파 세력의 주장과 달리 한국 복지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 중 최하위권에 속해 있다.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는 심화되어가지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정부의 재정지출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 전체 평균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경제의 올바른 성장을 이끌기 위해서도 복지를 확대하고 민주주의적 대표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절실히 요구된다.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이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것은 ‘5포세대’, ‘금수저, 흙수저’ 같은 담론이 잘 대변해준다. 장하성 고려대 교수는 소득 불평등 문제야말로 오늘날 한국 사회 불평등 문제의 핵심이라고 진단한다. 장 교수는 풍부한 자료와 이론적 논거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면서 한국 사회의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설득력 있는 대안을 제시해줄 것이다.

정치 분야는 손호철 서강대 교수가 맡았다. 손 교수에 따르면 한국 사회는 계급적 균열 이외에 지역 균열과 세대 간 균열로 점철되어 있다. 하지만 노동자·농민·빈민 같은 민중 계급이 제대로 조직되지 못함으로써 계급적 균열이 적절히 표현되지 못한 채 지역 균열과 세대 간 균열이 확장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손 교수는 제도와 운동의 차원에서 구체적인 답변을 제시해줄 것이다.

한국 현대사는 한미 관계의 역사였다고 할 수 있을 만큼 한국 사회에 미치는 미국의 영향은 강력하다. 하지만 한미 관계의 구조적인 불평등을 정확히 인식하고 그것을 교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오랫동안 한미 관계를 연구해온 정일준 고려대 교수는 거시적 시각과 미시적 시각에서 한국과 미국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좀 더 자주적이고 평등한 한미 관계의 가능성을 진단할 것이다.

과연 사회라는 것이 존재하는가? 마거릿 대처 전(前) 영국총리는 사회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일갈하면서 신자유주의의 포문을 열었다. 서동진 계원디자인예술대 교수에 의하면 문제는 사회적인 것의 차원을 복원하는 것이다. 대문자 사회의 시대, 사회과학의 시대, 사회주의의 시대는 물론 사라졌다. 하지만 계급적인 적대와 갈등이 편재하는 사회에서 이를 조정하거나 억압하려는 시도는 불가피하다. 그렇다면 계급적인 적대에 기반을 둔 정치의 전망은 어떤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해 서 교수는 냉철하면서 명쾌한 분석을 제안해줄 예정이다.

이러한 문제 이외에도 오늘날의 한국 사회에는 수많은 쟁점이 존재한다. 다시 한 번 거대한

열강의 각축장이 되고 있는 동아시아의 현실에서 남북 간의 긴장과 갈등을 해결하고 평화 공존과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올바른 길은 무엇인가? 수많은 갑들의 횡포 속에 짓밟히고 외면당하는 소수자들의 인권과 시민권을 보호하고 확장하는 길은 어떤 것인가? 또한 생태계 파괴와 화석연료 시대의 종말, 이상 기후 현실에 처하여 우리는 어떤 가치와 정책을 추구해야 하는가? 여전히 나아지지 않는 젠더 불평등과 학벌 중심의 교육 현실을 개혁하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다. 이에 대해서도 10여 명의 필자들이 분석과 답변을 제시할 것이다.

이제 다시 한 번 총선과 대선을 눈앞에 둔 정치의 격동기에 들어서고 있다. 이 시기는 단순한 정권 교체의 시기가 아니라, 유신 시대로의 회귀냐 우리가 살고 싶은 나라의 건설이냐의 양자택일 속에 70년 한국 현대사의 무게가 실린 인터레그넘의 시기이다. 대한민국이라는 정치공동체의 시민 주체들 스스로 우리가 살고 싶은 나라가 어떤 것인지 질문하고 그 실현 방안을 사고하고 요구하지 않는 한 이 나라의 장래는 가망이 없을 것이다. 우리가 진정 살고 싶은 나라는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는 어느 길로 가야 하며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가?

2. 복지: '반복지의 덫'에 갇힌 한국사회...복지와 경제민주화는 '한몸'

고세훈 (고려대 공공행정학부 교수)

“장애는 개인의 특성이 아니라 관계”라는 북유럽 어느 정치인의 말에 몽클했던 적이 있다. 청각장애인이 많은 마을에선 구성원들이 수화를 배우면 되고, 장애인을 위해 작은 2층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상가주인의 모습은 아름답다. 이는 사회경제적 약자들 전반에 적용된다. 개인의 결핍을 관계의 문제로 인식하는 일이야말로 복지국가를 위한 구상의 출발점이다.

신자유주의가 담론과 정치의 세계를 장악하면서, 사회경제적 차원의 절대적·상대적 박탈/결핍 정도가 심화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는 특히 심각하다. 가령 빈곤층이 얼마나 가난한지를 보여주는 빈곤갭(2014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한국이 세 번째로 높으며, 지금 추세라면 2020년 무렵엔 상위 1%의 소득이 전체소득의 15%를 웃돌면서 오이시디 최고의 불평등국가가 되리라는 추정도 있다.

그런데도 각종 통계가 보여주는 한국의 복지외지는 취약하고 한국 복지의 현실은 참담하다. 조세의 빈곤율 개선 효과와 정부 이전지출의 불평등 개선 효과는 각각 오이시디 평균의 4분의 1 수준이고 국민총생산 대비 복지관련지출에 관한 한, 한국은 오이시디에 가입한 1996년 이래 몇 해를 제외하면 내내 최하위에 머물러 있다.

열악한 복지재정은 공공부문의 인적 규모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인구 1천명당 공무원 수는 오이시디 평균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최하위이고 비오이시디 국가들 평균의 절반에도 미달한다. 서구라면 유권자의 대중을 차지할 복지수혜인구와 복지업무 관련 공무원 수가 모두 취약하니 복지공약이 눈앞에서 물거품이 돼도 이렇다 할 정치적 반향이 없다.

사부문의 자선실태도 빈약하기는 마찬가지다. 국민총생산 대비 한국 사회의 연간 개인기부-단속적이고 비정례적이어서 통계조차 부실한 형편이다-의 비율 0.05%(2004년)는 복지국가로 분류되지 않는 미국의 33분의 1, 영국의 15분의 1, 싱가포르의 6분의 1에 머문다. 우리는 복지‘국가’ 이전에 복지‘사회’를 구축하는 데도 실패한 것이다.

복지의 필요성과 국가의 복지외지 간의 현격한 괴리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는 반(反)복지담론들이 넘친다. 예컨대 우리는 성장보다 빈곤과 불평등을 더 심각히 체감하면서도 정부정책이 성장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고, 성장이 분배의 전제라는 담론에 매우 친숙하다. 물론 성장은 분배의 필요조건도 충분조건도 아니다. 서유럽국가들이 복지국가를 발전시킨 것은 종전의 폐허 위에서였고, 오늘날의 한국에 비해 소득수준이 뒤지던 1980년대에는 국가복지수준이 이미 완숙 단계에 들어섰다. 아마 미국이 복지국가의 반열에 들지 못한 이유를 성장의 부족 탓으로 돌릴 만큼 대담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기업 지배구조 민주적 개편해야

분배가 성장의 발목을 잡는 것도 아니다. 분배는 소비수요 진작, 인적 자원의 질 향상, 사회자본의 증대를 가져와 투자, 생산성, 효율, 따라서 성장에 기여한다. 낮은 축적단계에서도

일찍이 분배에 눈을 떴던 서유럽국가들은 오늘날 가장 선진적인 국가복지체계를 만들어냈으면서도 가장 고도의 성장을 일궈냈다. 요컨대 성장과 분배는 경험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배타적 개념이 아닌 것이다.

성장 중심의 사회가 설득력을 확보하려면 재분배 장치를 위해 최소한의 제도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때 성장은 그 자체가 권력적 과정이 되고 따라서 오히려 분배의 악화를 가져오기 쉽다. 최근 선택과 다원주의의 이름으로 옹호되는 복지민영화 담론 또한 허집투성이기는 마찬가지다. 그것은 시장탈락자들을 화폐관계의 그물인 시장 안으로 재차 밀어 넣는, 즉 시장 실패에 대한 교정을 다시 시장에 맡기자는 자기모순적 논리에 서 있는 것으로서, 국가복지의 본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다. 한국의 낙후된 국가복지, 척박한 민간복지전통과 만연한 반복지의식 등에 비춰 볼 때, 이 단계에서 복지를 민간에 맡기자는 것은, 복지를 아예 하지 말자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다.

기본적으로 복지국가란 불평등의 영역인 시장이 체제적으로 양산한 빈곤과 불평등의 문제를 ‘시장을 거스르는 정치’, 곧 형식적 평등이 확보되는 민주주의를 통해 완화/교정해 보려는 시도의 산물이다. 가장 근본적 의미에서 민주주의란 견제와 균형, 경제학자 케네스 갤브레이스(1908~2006)의 언어를 빌리면 “상쇄력의 제도화”에 입각해 있다.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수적 연대와 조직이 민주주의라는 장치를 통해 부에 대해 상쇄력을 행사한다는 의미일 터인데, 요컨대 ‘대표 없이 복지 없다’는 인식이다. 서유럽 복지국가가 시혜와 쟁취, 곧 보수주의와 노동정치를 두 축으로 발전했다면, 전자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도 민주주의를 경유하여 복지로 구현된 것이다.

무엇보다 선진복지국가들의 발전 정도는 노동운동의 강도 순위에 대체로 조응한다. 노조조직률이 높고, 노조운동이 산업별로 연대할수록, 노동자정당의 의석지분과 집권경험이 많을수록 복지국가는 발전해 왔다. 한국이 이 모든 지표에서 서유럽국가들에 비해 비교 자체가 민망할 정도로 열악하다는 점은 익히 알려져 있다. 그리하여 ‘국가복지의 제도화’ 부재란 당대의 계급 간 권력자원이 심대하게 불균등한 상태에 있다는 점을 말해줄 뿐인바, 부재란 바로 그러한 불균등한 상쇄력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부재는, 방치될 때, 부재의 심화라는 악순환을 낳고 그리하여 계급권력의 편차가 커질수록 계급협력의 지형은 그만큼 취약해지기 마련이다.

한국은 시혜의 전통이나 유산도 변변치 않고, 진보정치의 역량도 말할 수 없이 취약하다. 한국 복지가 수세적 재편이 아닌 공세적으로 추진돼야 하는 이유이다. 이는 민주주의가 권력의 연원인 시장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관점에 닿거니와, 그런 관점은 오늘날처럼 재벌이 전방위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해가고 정치적 민주주의마저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우리의 경우엔 더욱 절실하다.

20세기를 온전히 살아냈던 경제학자 갤브레이스는 그의 마지막 저서에서 “기업의 통제 없이 자본주의의 미래 없다”는 말을 유언처럼 남긴 바 있다. 즉 제도화의 부재 속에서 새 활로를 모색해야 하는 복지 한국의 과제는 위계적, 권력적 영역인 시장의 문제를 복지 구상의 내부로 포괄해 넘으로써, 국가와 시장 모두에서 권력의 행사 자체를 민주적으로 규율하는 제도적 틀을 정립하는 일과 맞물린다. 가령 최근 논란이 되는 경제민주화도 출자총액제한이나 순환출자규제 혹은 금산분리 등 자본행태에 대한 국가의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규제보다는, 시장 내의 계급권력이 길항하는 제도적 틀, 무엇보다 시장의 주 행위자인 기업의 지배구조를 민주적으로 개편하는 데 그 초점이 두어져야 한다. 핵심은, 재산권이나 소유권을 하

나의 다발(bundle)로 수용 혹은 폐기하기보다는 그 행사를 제한하는 시장구조를 만들자는 것이다.

실제로 국가복지와 경제민주화는 밀접히 연결돼 있다. 기업지배구조가 권위주의적일수록 '어두운 고용'—저임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고용—이 늘고, 그럴수록 시장탈락자의 수가 증가하여 국가의 복지부담이 커지며, 이는 다시 '어두운 실업'—실업급부의 수준과 조건이 열악한 실업—의 가능성을 키우며, 시장예외의 강제적 재편입, 따라서 재차 어두운 고용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는다. 긴축이 시대적 구호가 되고 복지국가가 수세에 몰린 오늘날에도 서유럽 복지체제의 골격이 건재한 이유는 다양한 수준의 경제민주화가 국가복지를 뒷받침하기 때문이다.

작금의 한국 상황이 증언하듯, 정치와 시장 모두에서 민주주의가 일상적으로 침해될수록 지적 절망과 함께 지식인들은 냉소라는 심리적 방어기제를 지니기 쉽다. 지식 중심의 보상체계가 주는 안락함도 여기에 한몫했을 것이다. 그러나 무릇 냉소란 모든 흔들리고 변하는 것들을 고정불변의 것으로 가정하는 그 본질에서 반지성적이다. 우리는 어차피 잠정적 타협(modus vivendi)을 추구하며, 권력관계와 그로 인한 상쇄력의 균형 또한 변하기 마련이다. 복지국가적 타협은 유토피아가 아니라 다양한 형태와 정도로 실험되고 있는 엄연하고도 구체적인 현실이다. 한국 복지의 토양과 노동운동의 현실을 볼 때, 해결은 어차피 중장기적 전망에 있다. 그 도정이 멀고 험한 것은 사실이지만(not easy), 가야 할 길이 복잡한 것은 아니다(but simple).

3. 경제: 기성세대는 자식들에게 물어보라

장하성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사람은 희망을 먹고 사는 동물이다. 청년세대들이 자신의 조국을 지옥이라고 부르는 까닭은 지금 당장의 일상적인 욕심을 채우지 못해서 칭얼거리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제대로 된 일 자리를 가지려고 자기계발하고, 자기소개서에 한 줄 넣기 위해서 쓸모없는 스펙 쌓는 데에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평등하고 불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한 조국에서 자신들의 미래에 희망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헬 조선’이라고 하는 것이다.

한국 경제는 목적을 상실하고 있다. 경제 성장이 더더진다는 말이 아니다. 아무리 성장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지난 10년간 성장의 과실 중에서 99%의 국민들에게 돌아간 몫이 반의반도 안 된다.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임금으로 먹고사는데, 임금은 안 오르고 기업만 부자가 되고 있으니 당연히 가계살림은 어려워지고 부채만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미래에 나아질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다. 전방위적으로 경제를 움켜쥐고 있는 재벌이 개과천선할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재벌 형제간의 싸움질도 저 지경인데 국민들의 고통이 눈에 들어올 리 없다. 원청 대기업의 갑질, 비정규직의 비애, 재벌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계열사 간 불공정 내부거래와 같은 비정상적 구조에서 벗어나서 먹고살 수 있는 국민이 벗어나 있겠는가. 이런 상황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다는 기성세대가 있다면 가장 먼저 자기 자식들에게 어떤 희망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보라.

가계소득은 제자리에 머물고 빚만 늘어나는데 기업만 부자가 되는 왜곡된 분배구조와 재벌 대기업만 살찌우고 중소기업이 신음하는 불공정한 시장구조가 지금의 ‘헬 조선’이다. 청년들에게는 첫 일자리 60%가 비정규직이니 인생을 일회용 노동자로 시작하는 것 자체가 지옥이다. 청년세대는 바로 이런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미래의 주인들이다. 누구 말대로 ‘조선족 수입’ 해온들 세상이 천국이 되겠는가.

이런 것들을 바로잡아 개천에서 용 나게 할 수 있는 대안과 정책은 얼마든지 있다. 변화란 안 될 이유는 백가지요, 해야 할 이유는 단 한 가지, 즉 희망이다. 이런 변화를 실천하는 데에 부작용이란 단지 기득권의 포기일 뿐이다. 절망의 지옥을 끝장내는 것은 대안 부재의 문제가 아니라 바꿀 주체의 문제이다. 누가 지금의 ‘헬 조선’을 만들었는가. 가장 직접적으로는 여당과 야당을 포함한 모든 정치인들이다. 권력을 가진 여당의 책임이 크지만 야당도 이를 방치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더구나 그들도 바로 얼마 전까지 여당이었으며 바꿀 기회가 있었다. 다음으로는 재벌을 규제할 책임과 권한이 주어졌는데도 이를 방조하거나 심지어 협조한 관료들이다. 고위 관료들은 보수 여당에 대기병들이지만 적지 않은 관료들도 현재 야당 의원들이 되었다. 그다음으로는 자신들의 산업화와 민주와의 업적에 취해서 자식세대들의 미래를 방기한 50대 이상 기성세대이다. 이 세대들은 지난 20년, 30년 동안 계속해서 한국 사회의 중심에 서왔고, 그들이 오늘의 ‘헬 조선’을 만든 장본인들이다. 산업화세대는 한국을 굶주림에서 벗어나게 했고, 민주화세대는 군사독재를 종식시켜 자유를 회복시켰다. 하지만 지금의 불평등과 불공정한 구조를 만든 장본인들도 그들이다.

한국전쟁 이후의 발전과정이란 항시 자식세대가 부모세대보다 더 잘되었던 희망의 시간이었다. 그렇기에 현재의 기성세대들은 자신들이 30, 40대 때부터 한국 사회의 변화를 주도해왔

고 아직도 정치와 경제를 장악하고 있다. 보수화된 기성세대들은 경제가 어렵거나 사회갈등이 높아질 때마다 ‘그 좋았던 옛날’ 박정희 향수에 젖는다. 또한 진보를 자처하는 기성세대들도 세상을 아직도 민주와 반민주, 노동과 자본의 이념적 대결구도로 말한다.

보수 기성세대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가치를 내걸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그리워하는 박정희 시대에는 자유도, 민주주의도, 시장경제도 없었다. 그들은 국민소득 2천달러의 박정희 시대 방식으로 지금의 3만달러에 육박하는 시대를 절단하고 있다. 아직도 정부가 라면 값, 커피 값, 소주 값을 정해야 경제가 성장하고, 길거리에서 장발, 미니스커트 길이를 단속해야 사회가 안정된다고 믿고 있는 듯하다. 계획과 규율의 덕목으로 자율과 창의를 끌어내려는 회극을 반복하고 있다. 보수의 이념이 재벌과 불평등과 불공정과 불법 탈법과 갑질과 비정규직 양산을 지키자는 것인지 모르겠다. 아니라면 박정희 시대의 무엇을 그리워하는지 알 수 없다. 한마디로 자가당착이다.

진보 기성세대도 ‘그 옛날의 향수’에 젖어 있기는 마찬가지다. 독재에 억눌린 노동을 역사의 전면에 내세웠고, 아이티(IT) 창업자로 신화를 만들었으며, 정치에 뛰어들어 정권까지 잡았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잠깐의 신화에 그치고 말았다. 노동조합이란 역대 연봉에 육박하는 소수의 재벌기업, 은행, 공기업에서만 작동할 뿐이다. 절대다수의 노동자들이 일하는 중소기업의 노조결성률은 2%에 불과하다. 그런 중소기업에서 자본 대 노동의 이념 대립과 갈등을 말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생똥맞은 것이다. 아이티 창업으로 세계 500대 기업에 등극한 신기업들도 후배 창업자의 길라잡이가 되기는커녕 재벌 흉내 내기에 바쁘다. 민주화 투쟁 정신으로 정치에 뛰어들었지만, ‘싸가지 없는’ 언사로 자기과시에는 성공했을지언정 세상을 바꾸는 데에는 게을렀다. 만약 진보 정치인들이 억울하다면 성장에서 소외된 저소득층들조차 보수세력을 자처하는 강북 우파가 된 모순을 고민해보아야 한다.

섭섭하겠지만 기성세대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와 별반 관계없이 그들의 자식들이 살아가야 할 세상은 천지개벽했다. 기성세대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누가 불평등한 한국을 바꿀 것인가에 대한 답이 명확해졌으며, 적어도 산업화와 민주화의 주인공을 자처하는 기성세대는 아니다. 아직도 자신의 과거에 머물러 있고, 복잡한 이해관계에 매몰되어 있으며,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에 너무 영민해져 버린 기성세대는 자기 자식의 미래에는 노심초사할지언정 자식세대 전체의 미래를 보지도 못하고 보려 하지도 않는다.

누군가 이제 그만 청년세대들에게 공포 마케팅을 그만두라고 지적했다. 그들에게 되묻고 싶다. 마케팅을 그만두려면 공포가 먼저 없어져야 할 것 아닌가. 다시 청년세대들에게 ‘멘토질’할 수밖에 없다. 새로운 세상은 새로운 세대가 만들어야 한다. 기성세대들도 젊었을 때에 한국의 변화를 주도했었다. 그 주도란 별 대단한 것이 아니며, 시작점은 그저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인식을 하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가난을 숙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보고자 댄땅에서 산업을 일으켰으며, 독재란 옳지도 않고 불편했기 때문에 저항했고, 배웠기 때문에 컴퓨터를 만졌다. 그런 것들이 시대를 주도한 것이다.

인식은 모든 행동의 출발점이다. 청년세대가 자신의 미래 희망을 빼앗아 가는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지금 현실에 대해서 내가 인식하고 내 친구들이 함께 인식하면 세상은 바뀐다. 과거의 질곡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필자 역시 기성세대의 한 사람이지만 지금의 청년세대가 정신적으로는 훨씬 건강하다고 믿고 있다. 즐기는 것 같지만 세상을 바로 보고 있으며 징징대는 것 같지만 노력한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는 데에는 지연, 혈연, 학연에 오염된 기성세대보다 훨씬 건강하다. 이런 20대와 30대가 대한민국을 바꾸는 중심에 서야 한다. 굳

이 기성세대의 동의를 얻을 필요도 없다. 필자와 동시대를 살아온 기상세대에게도 한마디 하고 싶다. 산업화세대와 민주화세대가 오는 총선에서 지난 30년, 20년을 지켜온 한국 정치의 중심적인 역할을 이제 그만 내려놓을 것을 권유한다.

4. 정치: 한국 예외주의를 넘어서 좌우 양 날개로

손호철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대통령이라는 직함을 가진 신사가 자전거 꿈무늬에 막걸리병을 싣고 삼십리 시골길 시인의 집을 놀러가더란다.” ‘우리가 살고 싶은 나라’라는 주제를 듣는 순간 정치학자로서 떠오른 것은 신동엽의 시다. 그러나 이는 낭만적인 헛꿈이다. 문명국들이 누리고 있는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만이라도 보장되는 나라에서 살고 싶다. 대통령을 풍자했다는 이유로 예술가가 끌려가지 않고, 아무리 틀린 생각이라 하더라도 특정한 사상을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을 가거나 당이 해산당하지 않으며, 여당의 원내대표가 헌법이 보장한 3권분립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찍혀나가지 않고, 갑자기 낙후한 독재국가에서나 하는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하겠다고 나서지 않는 나라에서 살고 싶다.

나는 이 모두를 응축해 ‘한국 정치의 예외주의를 넘어서’라고 말하고 싶다. ‘한국 예외주의를 넘어서 글로벌 스탠더드의 정치’에서 살고 싶다. 미국정치학의 중요한 화두 중 하나는 ‘미국 예외주의’이다. 왜 미국은 유독 유럽과 달리 사회민주당, 사회당, 공산당, 녹색당과 같은 좌파정당 내지 ‘진보정당’이 존재하지 않는가? 그 결과 정치가 ‘보수 대 진보’가 아니라 ‘보수양당제’를 취하고 있는가? 우리도 마찬가지다. 해방정국을 거쳐 분단이 고착화된 뒤 진보정당은 사라졌고 정치는 보수양당제가 지배해왔다. 미국과 비슷한 ‘한국 예외주의’이다. 게다가 미국과도 다른 우리만의 예외주의가 있다. 우리의 보수는 ‘글로벌 스탠더드의 보수’와는 다른 ‘극우냉전’ 세력에 가깝다.

근래 들어 냉전보수 세력 대 민주야당 세력의 갈등을 흔히 ‘보수 대 진보’라고 부르지만 이는 잘못이다. 한민당에서 더불어민주당(그리고 안철수의 국민의당)에 이르는 ‘민주야당’ 세력은 미국의 민주당과 비슷한, 개혁적인 ‘자유주의’ 정당이지 유럽식의 ‘진보정당’은 아니다. 조봉암의 진보당, 민주노동당, 정의당 등이 진보정당이다. 최근의 한국 정치는 새누리당 같은 보수(conservative), 개혁 내지 자유주의(liberal), 그리고 진보(progressive)라는 3분 구도이다. 정확히 표현해 거대양당과 취약한 진보의 2.1정당체제이다. 새는 좌우 날개로 날아야 하건만, 우리 정치는 오른쪽 날개만 있는 기이한 새이다. 아니 오른쪽엔 독수리 날개가, 왼쪽엔 병아리 날개가 달려 오른쪽으로 기우뚱하게 나는 기이한 새이다.

정치의 기능이란 ‘사회적 갈등의 제도적 조정’이다. 사회적 갈등을 정당과 의회와 같은 제도 내에서 조정하여 해소함으로써 파국을 예방하는 것이 바로 정치다. 그리고 현대자본주의 사회의 갈등은 노동 대 자본, 빈자 대 부자를 기본축으로 하되 생태 대 개발, 소수자(여성·동성애자·장애인 등) 대 다수자, 평화 대 전쟁과 같은 갈등들이 중첩되어 있는 ‘진보 대 보수’의 구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치도 이 같은 ‘진보 대 보수’의 구도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우리는 보수일변도의 정치가 보수 대 진보라는 사회적 갈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갈등의 제도적 조정’이란 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가 바로 골리앗투쟁과 희망버스이다.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지 못하는 ‘제도정치의 무능력’이 ‘거리의 정치’의 일상화를 가져온 것이다. 외국 학자들과 사회운동가들은 우리의 거리투쟁과 운동을 부러워한다. 그럴 만하다. 그러나 뒤집어 생각하면 이들이 부러워하는 활발한 거리투쟁은

한국 정치의 무능력의 결과라는 점에서 자랑거리만은 아니다. 정치가 제 기능을 다해 외국이 부러워하는 거리의 정치가 사라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고 싶은 나라이다.

국민대통합위원회가 지난 연말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민들이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갈등은 계층(75%), 노사(68.9%), 이념(67.7%), 지역 갈등(55.9%) 차례였다. 특히 계층갈등은 조사를 시작한 2010년 이후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헬조선, 금수저 논쟁을 생각하면 당연한 일이다. 시급히 해결해야 할 갈등도 이념, 계층, 노사, 지역의 차례였다.

이처럼 계층과 노사 갈등이 심화된 것은 보수정부의 무능으로 1997년 경제위기가 찾아온데다가 김대중 정부가 위기 극복을 위해 시장만능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이후 정권들이 이 같은 정책을 계승, 심화시켰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때문에 생겨난 사회적 불평등과 갈등을 정치가 제 기능을 해서 풀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즉, 그 중심에는 신자유주의와 보수독점체제라는 한국 정치의 예외주의가 자리 잡고 있다.

한국 예외주의는 잘 알려져 있듯이 분단에 따른 반공주의 등에 기초해 있다. 그 결과 '진보 대 보수'가 아니라 보수양당 간의 '민주 대 반민주'가 한국 정치의 기본틀이었다. 그러나 80년 광주학살 이후 진보가 살아났다. 또 반공주의가 약화되고 민주노조가 생겨나는 등 진보의 성장에 유리한 조건들이 나타났다. 그러나 새로운 장애가 등장했다. 87년 민주화 이후 약화된 민주 대 반민주를 대체한 것은 진보 대 보수가 아니라 지역주의이다. 한국 정치를 지배하는 것은 지역주의, 그리고 최근 부상한 세대갈등이다. 한국 정치는 지역주의의 압도적 우위하에 커지고 있는 세대갈등, 약화됐지만 사라지지 않은 민주 대 반민주, 그리고 아직 제대로 자리잡지 못한 진보 대 보수가 결합해 있는 구도이다.

지역주의가 하루아침에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또 호남이 '민주주의의 보루'로서 역사적 역할을 해온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를 넘어서야 한다. 김대중 정부를 통해 호남의 한은 이제 어느 정도 해소됐다. 또 인구 면에서 영남이 누리고 있는 압도적 우위를 생각할 때 지역주의 정치는 '지는 게임'이다. 특히 호남 인구가 충청보다도 적어지는 등 줄고 있다. (이는 보수의 아성인 고령층의 증가와 함께 우려되는 인구학적 추세이다.) 박정희 정권을 무너뜨린 부마항쟁이 보여주듯이 90년 3당통합 이전에 부산경남은 '민주세력'이었다. 단기적으로는 영남패권주의를 내파시켜 부산경남을 '민주진영'으로 견인해야 한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지역구도를 해체해 진보 대 보수의 정치구도로 가야 한다. 거지부터 재벌까지 호남은 자기 지역당을, 영남은 자기 지역당을 찍는 '초계급적 지역연합'을 호남과 영남의 노동자들이 지역을 넘어 진보정당을 지지하는 '초지역적 계급연합'으로 바꿔야 한다.

한국 정치가 예외주의를 벗어나 '진보 대 보수'라는 '글로벌 스탠더드'로 가기 위해서는 제도개혁이 필요하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제안대로 비례대표를 확대하고 독일식 연동제를 도입해 사표를 줄여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선거에서 인구격차에 의해 3 대 1에 달하는 표의 가치의 차이는 위헌이라고 판결했지만 양대 거대정당을 찍은 표는 진보정당에 던진 표의 4배로 계산되고 있다. 그럼에도 거대양당은 야합하여 오히려 비례대표를 줄이는 위헌적인 계약을 단행했다. 사표를 줄이고 야권분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 사상의 자유를 제한하는 국가보안법도 폐지해야 한다.

진보정당의 성장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더민주와 같은 자유주의 정당들이 좌클릭해야 한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신자유주의정책에 따른 양극화가 냉전적 보수세력의 지지기반('강북우파')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 정책에 대한 발본적인 반성과 청산이 필요하다. 특히 지

금까지의 ‘노동 없는 복지’ 노선에서 ‘노동 있는 복지’로 바뀌어야 한다. 진보정당은 민주노동당으로 상징되는 진보정당운동 3기를 끝내고 새로운 순환을 시작해야 한다. 과거의 ‘친북노선’을 넘어서고 비정규직, 청년세대, 이주노동자를 포괄하는 노동운동의 재구성, 여성운동, 환경운동 등을 포괄하는 무지개연합을 추구해야 한다. 진보정치를 통해 신자유주의와 보수독점 정치의 결과인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해야만 시장의 낙오자들을 중심으로 한 한국형 과시즘의 기반을 해체할 수 있다. 좌우의 정상적 두 날개로 나는 정치,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우리가 살고 싶은 나라’이다.

5. 사회: 사회를 복원할 것인가 재발명할 것인가

서동진 (계원예술대학교 융합예술학과 교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설명할 때 곧잘 들먹이는 말 가운데 각자도생의 사회란 것이 있다. 어찌 듣자면 그럴듯한 말일 수도 있지만 조금 뼈뺌하게 새기자면 난센스에 가까운 말이기도 하다. 각자도생하며 살아가는 개인들만이 있는 세계에 사회 따위란 없을 터이기 때문이다. 물론 한 발짝 물러나 달리 생각해볼 여지도 있다. 개인들이 자기 이해를 추구하면서 만들어지는 네트워크가 사회 없는 사회의 그 진짜 면모가 아니겠냐고 말이다. 그렇다면 각자도생의 사회란 말은 사회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외려 사회가 자신을 만들어내는 새로운 방식을 말해주는 것이다. 어느새 사회란 말이 없어도 사회란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세계에 살게 된 셈이다.

어떤 이는 사회가 사라졌다고 서글픈 낯을 짓는다. 그리고 사회를 복원하고 되살려야 한다고 말한다. 인터넷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감정적인 검색어는 외로움이라는 어느 빅데이터 분석업체의 이야기가 들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조사한 '2015년 삶의 질 지수'에 따르면 문제가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친구나 친척, 이웃이 있는냐는 문항에서 조사대상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전한다. 통계청의 '한국의 사회동향 2015'에서 드러난바 한국인 가운데 56.8%는 여가 시간을 혼자서 보낸다는 소식에 사람들은 가슴을 친다. 모두 더 이상 따뜻한 인간관계는 사라지고 섬처럼 나 홀로 살아가는 이들의 세계, 즉 사회 없는 사회를 말해주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사람을 보고 사람을 찾는 사회 만들기가 큰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사회는 쉽게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일까.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정치적 프로그램은 사회의 파괴를 겨냥한다. 물론 이렇게 말하려면 사회란 개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두 개의 정치적 이념인 자유주의와 사회주의가 합의했던 사회에 관한 이상적인 이미지가 있었다. 연대로서의 사회, 안전의 제도적인 네트워크로서의 사회라는 것이 그것이다. 사회 따위란 없다고 영국 수상 마거릿 대처가 강변했던 '사회'란 복지국가 혹은 사회국가라고 말할 때의 바로 그 사회였다. 그리고 그녀가 창설하고자 했던 세계는 사회 없는 사회, 개인과 가족들의 자율적인 네트워크로 구성된 사회적 관계의 세계였다. 그러므로 사회적 관계와 사회는 다른 것이다. 사회적 관계는 언제 어디에나 있다. 그러나 사회란 엄연히 다르다. 후자는 세월을 거치며 정치적 아이디어와 투쟁을 통해 고안되고 구체화된 역사적인 현실이자 이념이다. 19세기 후반부터 유럽을 넘어 다른 세계로 폭발적으로 확산되어 사회적 관계를 가리키려 도입된 사회(Society)란 낱말은, 그런 점에서 지시어라기보다는 패러다임에 가깝다. 물론 그즈음 형성된 사회주의란 정치는 숫제 사회를 자신의 정치의 바탕으로 삼았다.

사회란 개념은 정치적인 의지와 투쟁을 동원하고 사회적 갈등과 대립을 중재하는 해법을 제시하며 사회를 구성하는 성원들을 독특한 모습으로 가시화하였다. 그것은 먼저 국민국가를 경계로 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보장과 복지라는 도구를 활용하였다. 그리고 성장과 분배, 발전과 행복이라는 그림을 배경으로 사람들을 그려 넣었다. 그렇게 그려 넣어진 사람들을 가리키는 이름은 인구 혹은 국민이었다. 전설로 회자되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란 말처럼 유년에서부터 노년까지의 삶, 다시 말해 인구의 행복이야말로 정치가 관심을 기울일

대상이었다. 그것이 바로 사회라는 대상을 관리하고 통치하는 국가라는 사회국가를 낳았다. 사회국가란 개념은 자본주의의 역사적 단계와 대응한다는 점 역시 간과할 수 없다. 그것은 “사회문제”를 세상에 알린 19세기 중반의 노동자, 농민의 반란과 저항에 의해 촉발되었고 독일과 프랑스, 영국에서 각기 서로 다른 모델을 통해 실험되었다가 양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발전된 국가에서 널리 확산되고 또 정착하였다. 그렇지만 이러한 사회국가는 지난 세기 후반부터 슬금슬금 허물어지기 시작하다 이제는 바야흐로 흔적만 남기고 사라질 태세인 것처럼 보일 지경이다. 무엇보다 세계화 그리고 금융화로 집약되는 자본주의의 변화는 사회의 토대를 붕괴시켰다. 사회국가는 임금노동자와 자본의 타협을 통한 재분배의 체계를 도입하고 실행하였다. 이는 국민국가의 경계 안에서 자본은 노동자의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의 지배에 대한 동의를 전제로 임금소득은 물론 산업재해를 비롯한 다양한 질병에 대한 보험, 양육과 교육, 노령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였다. 실업과 빈곤이 초래한 두 개의 국가를 통합하기 위하여 노동과 자본은 모두가 함께 공동의 운명에 연루된 연대의 체계에 속해 있음을 기꺼이 인정하였다. 법인세는 확대되었고 보장의 범위는 확장되는 듯이 보였다. 발전국가인 한국은 복지를 대신해 폭발적이면서 지속적인 성장이라는 신화가 있었다. 임금소득은 꾸준히 성장하는 듯이 보였고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는 교두보였던 교육은 확대되는 듯했으며 영아사망률은 급감했고 건강 수준도 향상되었고 기대수명도 늘어났다. 성장에서 흘러나온 과실이 복지를 메꿔주었던 격이다.

그렇지만 1970년대를 전후한 위기는 자본의 반격을 초래하였다. 세계화는 자본의 국민적 경계를 허물고 유연화, 아웃소싱, 외주화, 자본의 이전 등을 일반화하였다. 금융화는 발전된 자본주의국가의 자본들을 투기꾼으로 탈바꿈시켰고 주주자본주의란 미명하에 경제를 말끔히 수술하였다. 노동자는 이제 자산관리자인 척 꾸며졌고 주택이나 부동산, 주식, 보험 등에 투자함으로써 자신의 부를 늘려가는 것을 당연지사처럼 여기게 되었다. 이는 먼 나라의 일이 아니다. 국내 재벌기업의 이윤보유금은 천문학적인 액수이고 가계부채는 1200조원을 돌파한 지 오래이다. 긴축이란 요란한 슬로건이 유럽을 뒤덮고 있어도 국가부채 역시 1천조원을 돌파한 지 오래이다. 부채를 통한 성장이라는 지난 수십 년간의 한국 자본주의의 궤적은 저 성장과 실업이라는 두 개의 지표 아래 요약된다.

이는 사회보장은 변변치 못했어도 발전에 따른 양적 성장의 과실을 찢끔찢끔 나눠 받으며 삶을 향상시킬 수 있었던 발전국가의 ‘사회 없는 사회’의 메커니즘도 마비 상태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 그럴수록 발전과 성장의 경험이 침전시킨 역사적인 기억은 더욱 맹렬히 타오른다. 10퍼센트 안팎을 넘나드는 고성장 시대의 따뜻했던 삶을 향한 향수는 <국제시장> 같은 영화의 퇴행적인 유토피아적 기억 속에서 넘실댄다. 그런 점에서 급진적인 정치를 대체하며 사회의 복원을 꾀하는 다양한 시민운동의 전략은 납득할 만한 것이다. 세련된 소비적 라이프스타일 운동이라는 혐의를 받는 밥상공동체운동에서부터 시작해 마을 만들기, 대안통화,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공정무역, 지자체 수준의 기본소득 운동, 청년수당 지급 등 이루 열거하기 어려울 만치 다양한 운동은 윤리적인 의지를 통해 사회를 복원하고자 한다. 치유의 경제, 상생의 자본주의, 대안경제 등 이러한 기획이 형성하고자 하는 경제에 관한 이미지 역시 한결 성가를 구가한다. 그렇지만 이는 자본주의적 사회관계의 바깥에서 선한 의지를 가진 이들의 노력을 통해 사회를 도입하려 한다. 그런 연유로 그것은 사회 외부의 사회에 머물고 만다. 따라서 자본주의를 손질하지 않은 채 사회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름다운 거짓말로 그칠 수 있다. 따라서 사회를 복원하는 착한 의지에 머물지 않고 변화된 자

본주의적 사회관계의 조건 위에서 연대를 재발명하는 것이야말로 급선무이다. 1그램이라도 사회주의를 가미하지 않은 순수 자유주의는 불가능하다. 최소한의 사회안전망도 없이 정글과 같은 완전 자유경쟁을 도입하자는 자유주의자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여전히 금기처럼 남아 있는 사회주의를 정치의 지평에 다시 끌어들여야 한다. 사회주의가 금기였던 나라 미국에서도 샌더스란 대선후보가 약진하고 있다. 지난 세기 사회주의가 실패한 것은 강한 국가의 비효율성 탓이 아니라 대의민주주의의 신화에 갇힌 탓이었다. 사회를 위한 정치가 어제의 사회주의와 같은 모습은 아닐 것이다. 그리고 이는 사회를 복원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새로운 사회를 창립하는 기획이 될 것이다.

6. 한미관계: 문제는 통치다! 제국과 위험 사이의 한국, 한국인

정일준 (고려대 문과대 사회학과 교수)

재작년 4월의 세월호 사건이 안전문제를 성찰하게 했다면, 올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2월 장거리 로켓 실험은 한반도의 안보현실을 돌아보게 만들었다. 둘 다 재앙임에는 분명하다. 그렇지만 각각의 사안을 파악하는 방식과 대응 방안은 사람에 따라 사뭇 다르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사건은 하나의 입장이나 분석틀에 의해 깔끔하게 포착될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은 미국이고 한국은 한국이다?

작년 9월3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인민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전쟁 승전 70주년’ 기념행사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했다. 천안문 성루에 올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오른편으로 푸틴 러시아 대통령 다음에 서서 열병식을 지켜보는 사진은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중국의 한반도 공식 파트너가 북한에서 남한으로 바뀌었나? 아니면 남한의 국제 파트너가 미국에서 중국으로 바뀌었나? 박 대통령이 중국, 러시아 최고지도자와 나란히 서 있는 장면은 마치 ‘블루팀 선수’가 ‘레드팀 진영’에 서 있는 듯했다. 상전벽해를 넘어 천지개벽 같은 함축을 담은 사진이었다. 한국이 미국의 그늘을 벗어나서 마침내 ‘나의 길’을 가려는 것처럼 보였다. 1970년대 초반 냉전에서 데탕트로의 전환기에 자주국방과 ‘한국형 민주주의’를 추진했던 박정희 대통령처럼, 탈냉전과 G2 시대에 박근혜 대통령은 자주외교와 ‘대박형 민족통일’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렇지만 한 장의 사진에 대한 기호학적 분석은 해석학적 순환의 수레바퀴를 벗어나진 못했다. 일본 제국주의로부터의 해방 70주년 행사는 동시에 ‘미국 제국과 중국 제국 사이의 한국’이라는 적나라한 국제정치 현실을 보여주었다. 제2차 세계대전과 6·25전쟁 그리고 베트남전쟁을 거치면서 한미관계는 피로 맺어졌다. 혈맹인 한미관계는 여타 국제관계와 질적으로 다르다. 이를 ‘한미관계 예외주의’라 부를 수 있을지 모른다. 그렇지만 중화질서를 국제질서인 양 오인하던 구한말의 선조들은 망국을 자초했다. 냉전이라는 하나의 세계적 순환은 종료되었다. 동북아에는 새로운 국제질서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 개혁개방정책을 통해 세계시장에 참여한 후 중국은 한국과 경제적, 문화적으로 교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정치적으로도 밀접해진 중국은 더 이상 남이 아니다. 그런데 중국은 동북아에서 군사적으로 미국과 대립, 경쟁하고 있다. 냉전 이후임에도 불구하고 휴전선과 대만해협은 미국의 직접적인 관심지역이다. 지리적으로 아시아 국가는 아니지만 미국의 국익은 동북아에 깊이 새겨져 있다. 동족인 북한의 핵문제를 둘러싸고 미국의 아시아 회귀 움직임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혈맹인 남한의 운신 폭은 넓지 않다. 미국과 남한은 결코 남이 아니다. 다시 한번 한국은 제국 사이에 끼였다.

미국은 미국이 아니고 한국은 한국이 아니다!

한미관계를 이해하고자 할 때, 우리는 흔히 “우리에게 미국은 무엇인가?”라는 자아준거적인 질문을 던진다. 그렇지만 관점을 바꾸어 “미국에 한국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도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한미관계를 상호적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다. 역지사지를 통해 지피지기할 수 있는 것이다.

식민지 조선의 해방과 분할점령, 남북한 분단정권의 탄생, 한국전쟁에서의 남한 방어 그리고 자본주의적 경제발전과 자유주의적 민주화 전 과정에 미국이 깊숙하게 관여했다. 한국은 엄연한 주권국가이다. 그렇지만 지난 두 세대 동안 진행된 미국화는 그 속도와 폭 그리고 깊이에서 예전의 중국화, 일본화를 훨씬 능가한다. 냉전기 미국은 직접지배보다 간접지배를, 또 공식제국보다 비공식제국을 선호했다. 공식지배는 군사력에 의존하는 방식이며, 비공식 지배는 현지 엘리트에 위임하는 것이다. 미국은 이익뿐 아니라 이념과 제도를 통한 동맹을 추구했다. 시간을 두고 한국이 스스로 미국화하기를 바랐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은 미국과 여러 차원에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군사적으로는 동맹관계이다. 수만 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전시작전권도 미국이 가지고 있다. 미국식 자유민주주의는 한국의 정치모델이다. 선거정치 현장을 보면 한국 정치가 실제로 얼마나 미국화되었는지 실감할 수 있다. 한국 경제는 영미형 자유시장경제를 지향한다. 한국의 신자유주의적 전환은 전면적으로 미국화된 한국의 사회적 맥락을 빼놓고 설명할 수 없다. 문화 차원에서 진행된 미국화로 미국식 생활양식과 사고방식이 대량복제되었다. 대학교수의 미국 박사 충원을 넘어 영어 조기교육 열풍에 이르면, 위로부터의 형식적 포섭 단계를 지나 아래로부터의 실질적 포섭 단계에 이르렀다고도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지난 70여년의 한국 현대사는 총체적인 미국식 사회변형 과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 미국은 더 이상 태평양 건너의 초강대국이 아니다. 한국도 더 이상 '은둔왕국'이 아니다. 한국의 정체성과 한국인의 정체성은 바뀌었다. 이는 역사 축에서 보아도, 국제관계 축에서도 그러하다.

한국이 미국이고 미국이 한국이다

미국의 국가는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국익을 추구하는 보통국가로서 미국이다. 다른 하나는 국제질서를 유지하고 세계자본주의체제의 재생산을 관리하는 제국으로서의 면모이다. 한미관계를 전자에 국한할 경우 한국과 미국은 서로 국익을 추구하는 가운데 외적으로만 관계를 맺어나가는 합리적 행위자로 비친다. 그렇지만 한미관계를 국제정치와 세계경제 통치자로서의 미국 제국의 역할에 위치시키면 전혀 다른 관계동학이 펼쳐진다. 이는 한미관계를 국가 사이에서 작동하는 권력에 대한 새로운 이론적 인식에 기반해서 파악할 것을 요구한다.

권력이 작동하는 통로가 기존 국가기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인지 아니면 국가엘리트 자체를 형성하는 사회적 구성 과정을 통해서인지를 한 축으로 하고, 권력이 작동하는 사회관계가 직접인지 또는 간접인지에 따라 국제관계에서 행사되는 권력 유형을 각기 강제권력, 제도권력, 구조권력, 생산권력이라는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발사를 둘러싼 한미관계에 이를 적용해보자. 미국이 한국 정부에 직접 압력을 가해 대북제재에 참여시켰다고 파악하면 이는 강제권력이다. 미국이 국제규범과 객관적인 정보에 입각하여 한국의 지배엘리트로 하여금 사태를 정확히 파악하도록 하는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 경우 이는 제도권력이다. 한국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기보다 한국 및 세계의 시민사회에 북핵 문제의 위험성을 알려서 간접적으로 주의를 환기하는 미국의 역할을 강조한다면 이는 구조권력이다. 끝으로 미국의 국익이 곧 한국의 국익이라고 동일시하는 한국인들의 호응이 커서 한국 정부가 자발적으로 동참했다면 이는 생산권력이다. 박근혜 정권의 개성공단

폐쇄 조치도 한미관계에서 행사되는 권력을 어떤 유형으로 파악하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진다. 한국이 미국에 구조적으로 종속된 것으로 보는 시각도, 한국이 미국과 자유롭게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보는 시각도 모두 일면적이다. 한국과 한국인은 변했다. 미국이 부과한 자유주의 통치성이 두 세대에 걸친 제도 변형과 주체 형성을 통해 국가 간의 공식적인 한미 관계를 안팎과 위아래에서 단단하게 떠받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 한국과 미국은 하나다.

한국은 한국이고 미국은 미국이다

한미관계는 남북관계를 거울상으로 전제한다. 한미 간 ‘친구 만들기’ 프로젝트는 남북 간 ‘적 만들기’ 기획과 동전의 양면이다. 미국을 주적으로 삼은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실험이 곧바로 한국의 안보위기로 동일시되는 것은 착각이 아니다. 분단국가 한국의 민족정체성과 국가정체성은 일치하지 않는다. 후자가 전자에 우선하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의 국가는 한미관계와 남북관계 사이에서 갈등하고 동요한다. 이 또한 현실이다. 그렇지만 한국의 국익을 지키기 이전에 국익이 무엇인지를 정의해야 하는 것은 우리 한국인들이다. 그래서 여전히 한국은 한국이다.

한국의 국가는 시민사회와의 관계에서는 강한 국가였지만 미국제국과의 관계에서는 약한 국가이다. 민주주의에 대한 불만 속에서 보수정권이 연이어 탄생했다. 그런데 불만을 잉태한 것은 불안이다. 정치의 정치라고 할 수 있는 통치의 기본은 국가안보, 사회보장, 개인안녕이라는 중층적 과제를 동시에 관리하는 일이다. 통치가 정치보다 한 단계 위에 있으며 훨씬 포괄적인 활동이다. 운동정치는 민주주의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그렇지만 민주주의 심화는 다르다. 민주주의의 민주화를 위해서는 주체로 각성된 시민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정부 및 전문가집단에 의한 중재가 필요하다. 게다가 한국의 국가는 전 지구적 도전에도 직면했다. 시민사회와의 관계에서도 만능 해결사가 아니다. 국가가 나서서 기술관료적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국가를 통하지 않고서 국제, 국내 문제의 해결은 난망하다. 우리가 파악하거나 감당할 수 없는 밖으로부터의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도전도 엄청나다. 우리가 통치할 수 있다고 믿는 내부의 문제도 간단치 않다. 국가안보, 사회치안, 시민자율 그리고 개인규율을 한데 묶는 국가의 헤게모니 프로젝트 발진이 요구된다. 이는 국가안보, 경제발전, 사회안녕, 개인존엄을 아우르는 또 다른 정치합리성을 꿈꾸는 것이기도 하다. 내부와 외부, 그리고 공적, 사적 영역을 경계구분하고 끊임없이 통치하는 국가활동이 필수적이다. 이런 식으로 통치당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곧 비판이다. 비판이나 저항이 통치에 우선할 수 없는 이유가 이것이다.

문제는 통치고, 통치는 투표야!

세월호 사건이 비극인 것은 구조 가능했는데 그렇게 못했기 때문이다. 이는 통치 가능했다는 의미이다. 이에 비해 북핵위기가 실감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통치할 수 있는 영역 밖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과연 그러한가? 알고도 손쓰지 못한 아쉬움은 진실을 규명하고, 관련자를 처벌하고, 앞으로 같은 재난을 반복하지 않는 제도를 수립함으로써 털어나갈 수 있을지 모른다. 몰라서 손쓸 겨를이 없었다는 변명은 국가안보에서 정당화될 수 없다. 나라는 망하면 끝이다. 따라서 “세월호가 먼저냐 북핵 문제가 먼저냐?” 하는 질문은 다

음과 같이 바뀌어야 한다. “세월호도 복해도!”

시민사회도 통치해야 하지만 국제관계도 그러하다. 남북관계도, 한미관계도 동시에 통치해야 한다. 한미관계와 한중관계도 그러하다. 나아가 예측과 관리가 가능한 재난뿐 아니라 예측을 넘어서 위험도 통치해야 한다. 통치는 국가를 재정치화하는 일이기도 하다. 투표가 첫 걸음이다. ‘종이 짱돌’을 던지자. 투표는 대통령을 만들고, 대통령은 역사교과서를 만들고, 교과서는 시민을 만든다. 그러니 세월호를 기억하려면, 복핵위기를 극복하려면, 투표하자. 통치도 결국 투표로 만든다.

7. 한국 현대사: '사회력' 기반으로 '연성정치'가 이뤄지는 나라

김동춘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최근 국민대통합위원회의 조사에 의하면 응답자들의 35%는 경쟁사회, 18.4%는 양극화사회라고 답을 했고, 평등사회, 공정사회라고 답한 사람은 1%에 지나지 않았다. 이 보고서는 우리 사회의 갈등이 단절·원한·반감·단죄의 감정 등 극단적 트라우마 상태로 빠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많은 사람들이 극도의 불공정한 경쟁 속에서 불안한 상태에 있고, 많은 사람이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거시적으로는 한국전쟁 전후 국가폭력에 의한 피해와 공포, 가까이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만들어진 승자독식, 경제적 약자들만 경쟁으로 내모는 한국의 시스템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한국전쟁, 군사정권, 억압과 폭력은 지역 사회조직, 지방분권, 지방정치의 싹을 잘랐고, 모든 사회 구성원을 중앙정치만 바라보면서 정치권과 관료집단의 권위에 일방적으로 복종하되, 가족 단위의 생존과 출세만을 추구하도록 유도되었다. 어떤 과정을 거쳤든, 일단 싸움에서 승리해서 강자가 된 사람들에게는 최대한의 특권이 보장되었고, 탈락하거나 배제된 사람들은 무한대의 생존 경쟁에 노출되었다. 권력과 법에 대한 불신, 불공정한 경쟁은 사회적 연대를 해체하고, 각자의 방식으로 생존과 지위 상승의 길을 가도록 유도하였다. 정치는 사회적 요구를 집합적으로 대표할 수 없었고, 시민사회는 저발전되어 있었으며, 법과 언론은 편파적이어서 약자가 의탁할 수 있는 사회적 방어막이 없었다.

사회적 약자가 무방비 상태에 놓이고, 약자 간의 연대가 해체됨으로써 지역사회와 일터에서 개인은 완전히 원자화되었다. 인구의 80% 이상이 살고 있는 도시 지역은 단순한 거주 공간이지 주민 교류의 공간이 아니었고, 아파트는 곧 '부동산'이었다. 지역사회는 관변조직과 힘 있는 건설업자, 자영업자들이 움직였다. 기업에서 회사와 종업원의 관계는 수직적이며, 한국 경제를 좌우하는 재벌 대기업은 직접 고용하고 있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간접 고용한 중소기업, 하청기업의 노동자들, 파견업체 노동자들과 그의 가족들의 삶까지 지배한다.

일제 식민지 지배, 군사독재, 그리고 신자유주의 질서는 형식적으로는 상이하지만, 국민을 순응과 경쟁으로 몰아넣어, 사회의 자생력을 말살하고 노동자나 서민대중의 조직화를 차단하고, 개인을 가족단위로 경쟁하도록 만든 점에서는 동일했다. 과도한 교육열로 표현된 능력주의와 순응주의가 사회 구성원 간의 수평적인 연대를 차단한 점도 동일하다. 그래서 오늘 한국은 경제적으로 성취한 것이 많지만, 삶의 질에서는 거의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다. 물질주의와 성장주의 외에는 사회의 미래를 둘러싼 담론과 사상도 거의 없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이루어져야 하고, 우리는 어떤 사회를 꿈꾸어야 할 것인가? 나는 국가 혹은 정치에 대비되는 '사회력' 혹은 '사회적 자생력'의 육성이 가장 시급하고, 사회적 연대가 경쟁을 보완 혹은 대신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회력'(사회적 힘)이란 사람들이 자신이 처한 문제를 '정치'에 덜 의존하고 해결할 수 있는 힘, 보통사람들이 연대를 통해 강자에게 맞설 수 있는 힘, 그리고 자신의 대표를 정치

적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는 힘을 말한다. 전쟁과 내전, 만연한 국가폭력으로 국민들이 자신의 재산과 생명을 지킬 수 없는 상황, 강대한 기업권력하에서 종업원이 고립된 개인으로 사용자의 전권에 무방비로 노출된 상태가 사회력 최저 상황이다. 반대로 지역사회에서의 주민조직, 노동조합, 영세자영업자, 중소기업 등 각 직업, 직능 단체 등 정당의 사회적 기반이 촘촘히 조직되어 자신의 문제해결을 위해 단결하고, 서로 간의 이해의 충돌을 조정할 수 있는 사회는 사회력이 극대화된 상황이다.

사회력은 사회조직과 그 구성원들의 자율성, 책임성, 공공성, 혁신능력, 학습능력, 도덕적 역량, 공감능력을 말한다. 시민사회에서 사회력은 갈등해결 능력, 정치사회에서 사회력은 투표참가의 열의, 국회의 사회적 대표성, 그리고 관료조직과 정치가들의 사회적 호응성 등을 통해 드러난다. 그런데 선거 외에 사회 구성원들이 국가의 정책 결정, 정치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로가 거의 전무하거나 대자본, 언론, 관료집단, 사법부 등이 입법부의 역할을 여러 방식으로 제압한다면 선거는 요식행위이자 국가 내의 '실질 권력'을 재생산하는 통로에 그칠 것이다. 정치력은 사회력에 기초를 두고, 국가의 힘도 궁극적으로는 사회력에 기반을 둔다.

국가의 억압, 경제적 불평등은 사회력을 제한하거나 해체한다. 특히 재벌 대기업이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와 사회까지 지배하는 오늘 한국에서 재벌의 과도한 사회경제적 지배는 사회력을 극도로 위축시키는 원인이다. 노조, 소비자, 주주, 이사, 지역 주민들이 재벌 대기업의 생산 활동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공공 복지기관, 협동조합, 각종의 시민기금이 시장에서 탈락하는 사람들의 버팀목을 해 주는 사회경제 질서는 곧 사회력이 작동하는 상황이다.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 공정한 경쟁이 필요하지만, 대기업의 경영권, 경제적 부가 세습되고, 중소기업과 영세상인들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없는 곳에서 사회적 혁신이나 활력, 기술의 발전은 이루어지기가 어렵다. 이것은 사회력의 고갈 상태인데, 사회력 고갈은 곧 경제성장도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다.

약자들이 사회력을 갖게 되면, 의회정치, 제도정치 밖의 정치, 즉 조정과 합의, 시민사회의 자생력과 자기치유력에 의해 많은 경제적 비용도 줄일 수 있다. 사회의 자기치유, 산업안전, 공공체육, 갈등조정기구가 작동을 하면 국가나 기업이 지불해야 할 의료비, 보험료, 각종 보상비, 소송비 등 갈등치유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나는 이와 같은 사회적 조정 과정을 '연성정치'라 부르고 싶다. 연성정치는 곧 시민정치, 혹은 시민자치, 사회의 정화능력을 말하는데, 억압적 공권력 발동, 제도정치나 소송, 사법부의 판결에 덜 의존하면서 이익집단이나 주민들 스스로 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다. 예를 들면 질병이 만연하게 되는 조건인 경제사회 환경은 문제 삼지 않고 의료를 공공적인 것으로 할 것인가 민영화할 것인가 논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의 발생 자체를 줄일 수 있는 사회경제 체제를 고안하는 작업이다.

세월호 사고가 발생했을 때 관료조직인 해경, 해양수산부는 물에 빠진 학생들을 거의 구조하지 못했지만, 인근에서 지켜보던 어민들은 곧바로 달려가 수십 명의 학생을 구조했고, 민간 잠수대원은 해경 이상으로 주검 수습에 큰 역할을 했다. 심지어 국가기관은 잠수사들의 자발적 구조를 오히려 막은 의혹도 있다. 세월호 인허가, 운항, 침몰, 구조 모든 과정에서

사회력의 작동은 거의 제로 상태였다. 사고 직후 국가는 주민들의 자발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격려해주면서, 민간이 손을 댈 수 없는 구조의 영역을 직접 담당했어야 한다. 우리 역사를 돌아볼 때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의병’이 한 역할은 매우 자랑스럽지만, 국가가 계속 의병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은 비극이다. 국가와 의병은 합심해서 나라를 구해야 한다.

전쟁, 경제위기, 대규모 재난 사태가 발생하면 사회력, 연성정치 없는 국가는 거의 관료적 판단에 의존하게 된다. 국가나 정치가 튼튼한 사회력과 연성정치에 기초할 때, 사람들의 삶의 질과 안정감만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 자체도 튼튼해진다. 19세기 말 이후 지금까지 한국은 사회력과 연성정치를 죽이고서, 국가의 억압과 대기업 몰아주기 방식으로 근대의 길을 걸어왔다. 21세기에는 지난 세기 우리가 겪어온 이런 ‘비뚤어진 근대’의 과정을 청산하고, 사회세력을 주체로 만들고 ‘연성정치’를 통해 상당 부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우리가 바라는 사회는 질서나 효율보다는 ‘생명을 부여하는 정치’, 신민(新民), 즉 백성을 ‘새롭게 하는’ 정치가 작동하는 곳이어야 한다. 인민이 지역이나 전국 정치에서 실질적인 주권자의 역할을 할 때, 그들은 생명을 찾고,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불평등의 극복, 재벌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노동자 연대조직의 활성화, 영세자영업자의 조직화, 비례대표 강화 등을 통한 정치의 사회적 대표성 제고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사회력과 연성정치 확대를 위해 남북한의 사실상의 ‘전쟁 상태’ 극복은 꼭 필요하다. 분단, 전쟁정치는 ‘사회’의 가장 큰 적이기 때문이다.

8. 도시: 도시의 앞날, '진보도시'의 조건은 무엇인가

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 교수)

최근 아시아권 주요 도시에서는 사람 중심 도시 만들기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진보도시론'이 빠르게 대두하고 있다. 이는 그간의 경제적 가치 중심의 외형적 도시 성장에 대한 반성으로 '사람 중심의 도시 가치'를 찾기 위한 노력으로 간주된다. 커뮤니티, 공공공간, 사회경제, 토속문화, 인권과 정의, 참여 거버넌스, 도시 권리 등이 진보도시론을 구성하는 키워드다. '진보도시 만들기' 국제 네트워크 구축에 앞장서고 있는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마이클 더글러스 교수에 따르면 외형적 화려함과 경쟁력보다는 토속성과 일상 행복이 도시를 사람 중심으로 만드는 데 더 중요하다. 그에 의하면 진보도시는 '장소의 번영'보다 '사람의 번영'을 최우선으로 하는 도시다. 따라서 진보도시는 현재의 지배적인 제도(국가나 시장 중심 제도) 아래에서 담보하지 못하는 사람의 가치를 도시주체들이 자의식적으로 복원하고 실현하는 것에 의해 특징지어진다.

'나아짐'을 의미하는 진보란 말은 계몽주의의 가치개념으로 등장했다. 진보란 말은 애초 '과학기술을 이용한 인간 삶의 개선'(특히 질병으로부터 해방 등)을 가리켰지만 점차 '사회적 진화'(social evolution)의 개념으로 확장되다가 19세기 중후반을 거치면서 자본주의 아래 불평등과 모순을 극복하는 정치적 실천 혹은 이데올로기를 지칭하는 용어가 되었다. 하지만 도시의 진보는 이보다 훨씬 오래된 계보를 가지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저서 <정치학>(Politika)에서 사람은 폴리스의 정치적 삶을 통해 인간본성(innate)을 발현하면서 최종적으로 행복(eudaimonia)의 상태, 즉 자아실현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했다. 도시의 진보는 단순한 불평등과 억압의 해방을 넘어 욕구 실현의 최종 단계인 자아실현으로 가늠되는 것이다.

이후 역사는 도시의 발전과 반비례하여 도시가 사람이 꿈꾸었던 것과 다르게 자유 대신 구속, 개방 대신 간헐, 평등 대신 불평등, 편의 대신 비용 등과 같은 역설의 삶을 강제해왔다. 이는 물질적, 제도적 질곡으로부터 해방되었다고 믿어지는 현대도시에서도 경험되는 바다. 사람이 도시를 만들었지만, 도시가 발전할수록 사람은 도시의 주인으로 대접받지 못하고 있다. 이를 우리는 '도시의 역설'이라 부른다. 도시의 역설은 도시를 다시 사람 중심의 도시로 만들기 위한 필요성과 당위성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도시를 사람의 온전한 삶을 돕고 담아내기 위한 터전으로 바꾸기 위한 시도는 사실 인류의 역사 동안 계속되어온 바다. 실제 역사상의 많은 (신)도시는 나름대로의 유토피아 꿈을 구현하기 위한 의도로 건조되기도 했다. 그리스의 폴리스, 로마시대의 공화도시, 토머스 모어 부류의 유토피아 이상을 실현하려는 공동체도시, 자치사회주의의 기원이 된 코뮌도시, 에버니저 하워드(Ebenzer Howard)의 '전원도시론'에서 비롯된 근대도시계획과 도시운동 등은 모두가 도시를 통한 진보를 모색하는 시도다.

근대에 들어 진보도시 만들기는 19세기 후반 영국의 자치사회주의(municipal socialism)란 자치제도의 개혁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하지만 '진보도시'(progressive city)란 용어가 본격

사용된 것은 1890년대 말 1900년대 초, 이른바 도금의 시대(Gilded Age) 미국에서다. 도시의 불평등, 불공정한 배분, 약자의 배제, 부동산 중심의 개발, 성장연합 중심의 도시정책 등에 대한 진보적 자치세력들의 반발에서 시작한 진보도시 만들기가 미국의 오랜 지방자치 역사다. 현재, 진보도시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는 미국의 대표 도시로는 뉴욕을 꼽을 수 있다.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은 뉴욕을 ‘모든 사람을 위한 도시’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당선됐다. 복지, 의료, 주택, 일자리, 환경관리 등 모든 측면에서 정치적, 제도적 경직성 때문에 하지 못하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보란 듯이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그러한 뉴욕을 진보도시라 스스로 불렀다. 현재 미국에는 300여개의 진보적 지자체 연합체인 ‘로컬 프로그레시브’가 결성되어 있다.

미국의 벌링턴, 오클랜드, 보스턴, 시카고 등을 대상으로 1970, 80년대 진보도시 만들기 사례를 분석한 피에르 클라벨 교수는 그의 저서 <시정에 들어간 활동가>에서 진보도시의 필요조건 다섯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시장(mayor)의 사회운동 기반. 둘째, 도시정부의 분배적 역할 비전 및 혁신정책의 추진. 셋째, 도시사회 계층(특히 빈곤층과 유색인)을 광범위하게 대표할 수 있도록 시정부의 개방을 위한 개혁. 넷째, 시장 임기를 넘어서는 자치혁신의 지속. 다섯째, 시정부와 지역사회의 이니셔티브를 서로 수용하는 관계의 제도화 등이다.

미국의 진보도시 만들기 경험을 반추해보면, 시정 운영이 국가나 시장 원리가 아닌 시민사회적 원리에 우선 기반해야 한다. 즉, 관료적 자치나 시장 중심의 정책운용 틀을 벗어나 근린사회의 주체들이 시정에 참여하면서 반성장연합, 반부동산개발, 반신자유주의 세력을 형성하여 정책의제의 중심을 성장과 개발에서 복지와 분배로 바꾸어 도시 약자의 이익을 우선 보호하며, 나아가 시민의 ‘도시에 대한 권리’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말하자면, 근린사회를 기반으로 한 자치혁신을 통한 ‘도시의 진보’는 현재의 지배적 시스템에 의해 배제되거나 억압된 사람·가치·부문·세력을 대변하고 옹호하되 혁신정책의 추진을 통해 이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도시의 진보는 국가나 사회 전체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구조적 원인’의 해결보다 시스템 작용의 (모순적) 결과로 나타나는 일상의 문제를 생활현장과 장소에서 주민 주도적으로, 점진적으로, 실효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으로 모색된다. 이러한 도시 진보는 이데올로기 대결이나 자본주의의 급진적 대안에 매몰되기보다, 현 시스템이나 구조(국가시스템 혹은 시장제도)의 모순에 대한 도시주체들의 해석으로부터 도출된 ‘상황적 이슈’를 실용적으로 해결하는 데 역점을 둔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의 진보도시 만들기는 ‘자유주의 혹은 실용주의’로 평가받고 있다. 말하자면, 진보의 초월적, 보편적 가치를 현실의 상황적 가치로 어떻게 해석해서 도출해 실천하느냐의 문제로 이해되는 미국식 진보주의의 모색이 진보도시 만들기의 이념이라면 이념이다.

진보도시 만들기는 진보의 보편적, 초절적 가치요소(자아실현, 해방, 정의, 권리, 분배 등)를 도시 맥락에서 해석해 도출한 상황적 가치요소(참여, 행복, 협력, 인권, 복지 등)로 정의하고 현실의 제도적 과정을 통해 어떻게 구현하느냐의 문제로 접근된다. 따라서 진보도시는 해석투쟁을 통한 도시 만들기의 ‘과정’(progress)이란 의미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성취하는 진보도시의 ‘이상’(outcome)이란 의미를 동시에 함축하고 있다. 후자가 목표 개념이라면, 전

자는 실천(조직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 두 요소를 함께 묶어 마이클 더글러스 교수는 진보도시를 구성하는 4대 요소를 제시한 바 있다. 첫째는 도시의 '포용성'으로서 시정에 대한 주민참여, 거버넌스, 시민주도성과 관련된다. 둘째는 '분배정의'로서 약자를 위한 자원의 배분과 대안경제로서 사회경제 혹은 공동체 구축과 관련된다. 셋째는 '도시의 상열'(conviviality)로서 행복, 자아실현, 정체성의 구현과 같은 요소를 도시 발전의 궁극 목표로 추구하는 것과 관련된다. 넷째는 '생태적 번영'으로서 지구온난화 시대 인간 생존의 위협을 극복하기 위한 도시 차원의 인간-자연 공생체제 구축과 관련된다.

9. 화쟁: 다투되 평화롭게 다투는 '화쟁적 성찰'

조성택 (고려대 철학과 교수 민족문화연구원 원장)

지금 한국에 정치가 있는가? 만약 정치의 목적이 오로지 권력 쟁취에 있고, 개인적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로서 이해된다면, 정치는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정치가 본래의 역할, 즉 '서로 다른 것들을 어울리게 하는 기술'로서 이해된다면 지금 한국에 정치는 '없다'.

선거에서 승리하는 일이 목표인 정치, 내 편은 옳고 저들은 그르고, 패거리에 충성하는 게 곧 정치생명을 보전하는 일이 되는 정치, 내가 살기 위해서 상대를 죽여야 하는 쟁투의 정치가 오늘날 한국 정치의 민낯이다.

최근 여소야대의 정국에서 '협치'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협치를 '다수'를 만들기 위한, 정치공학적인 게임으로 이해하는 한 한국 정치의 현실은 크게 나아질 것 같지 않다. '다수결'을 유일무이한 민주주의의 원리로 신봉하는 썬법의 정치가 우리 정치의 또다른 민낯이다.

쟁투의 정치, 패거리 정치는 직업 정치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시민사회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재현되고 있다. 오늘날 많은 한국인이 사회적·정치적 현안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말하는 것을 꺼린다. 특히 나와 다른 정치적 견해를 가진 사람들 속에서는 침묵을 금(金)처럼 여겨야 한다. '이쪽'과 '저쪽'을 가르는 진영논리 속에서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에 대해 증오와 혐오의 딱지를 붙이는 것을 서슴지 않기 때문이다. 인터넷과 같은 공론의 장에서 언어폭력과 정신적 폭력은 거의 일상화되었다.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토론하는 대화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세월호, 북핵 문제 그리고 최근의 강남역 화장실 여성 살해 사건 등, 심각한 사회적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우리 사회는 둘로 쪼개져 버린다. 사람들은 자신의 진영 안에서만 발언하려고 한다.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진영 안에서 발언의 편향성은 점점 강화되고 극단으로 치닫게 된다. 편이 갈리고 극단적 주장이 난무하는 가운데 사건의 본질은 온데간데없이 증발되어 버리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직업 정치인들에게 있다. 갈등과 분쟁을 사회적 의제로 만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역할임에도 지역민 혹은 특정 계층의 이해 다툼으로 변질·악화시키고 있다. 때로는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갈등을 확대 재생산하기도 한다. 지금 한국 사회는 정치가 작동하지 않는, 진정한 의미의 정치가 부재하는 사회다.

지난 세기 동안 한국인들은 국권 상실, 식민지, 분단, 그리고 전쟁이라는 참혹한 시련을 겪어오면서 집단적으로 내면화해온 꿈이 하나 있다. 그것은 '반듯한' 나라를 세우는 일이었다. 한국인들에게 반듯한 나라를 세우는 일은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개인의 성취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며 중요한 일이었다. 이는 한국인들만의 고유한 역사적 경험에서 만들어진 집단적

정서와 같은 것으로, 민족주의와 같은 개념의 잣대만으로는 온전히 이해되지 않는다. 한국의 산업화와 민주화를 추동했던 역사적 동기 또한 ‘개인’의 이익추구와 권리신장이라는 서구적 관점만으로는 결코 이해되지 않는다. 식민지에서 해방된 개발도상국의 한국인들에게 자유와 민주 그리고 윤택한 삶이란 개인적 동기 이전에, ‘반듯한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집단적 염원 같은 것이었다.

산업화와 민주화에 이어 이제 우리 모두가 살고 싶은, ‘반듯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또 하나의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그것은 정치를 개혁하는 일이다. 이 글에서 제안하는 ‘화쟁의 정치’는 정치개혁의 청사진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 시작을 재촉하기 위한 것이며, 만들어가야 할 새로운 정치문화의 모습을 그려보기 위함이다.

화쟁(和諍)은 원효(617~683) 고유의 용어다. 화쟁은 특정한 사상체계가 아니라 일종의 세계관이다. 화쟁은 다양성을 긍정하는 다원적 세계관에 기초하여, 경전을 둘러싼 다양한 견해들의 상호 배타성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일종의 해석학이라고 할 수 있다.

원효는 화쟁론을 통해 서로 다른 주장들이 결코 모순되거나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점은 원효가 들고 있는 ‘장님 코끼리 만지기’의 예화에서 잘 드러난다. 코끼리 전모를 다 볼 수 없는 장님들은 각자가 만지고 있는 부분이 코끼리의 모습이라고 주장한다. 어떤 이는 코끼리가 “벽과 같다”고 하며 또다른 이는 “기둥과 같다”고 한다. 그야말로 ‘백가(百家)의 이쟁(異諍)’이다. 이러한 상황을 두고 원효는 “모두 옳다”(개시, 皆是)고 한다. 각 주장들이 코끼리가 아닌 다른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동시에 원효는 “모두 틀렸다”(개비, 皆非)고 한다. 코끼리 ‘전체’를 생각한다면 각각의 주장 모두에 부족함이 있기 때문이다.

개시와 개비는 동전의 양면이다. 개시개비는 A가 맞으면 B가 틀렸고, B가 옳다면 A가 그르다는 이분법적 사고를 넘어 ‘복수의 옳음’을 용인하는 것이며 나아가 ‘나의 옳음’이 절대적일 수 없음을 인정함으로써 더 큰 옳음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요컨대 개시가 ‘벽’과 ‘기둥’ 둘 다 코끼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모순과 역설을 공존하게 하는 원리라면 ‘개비’는 모순적 상황을 새로운 변화로 이끌고자 하는 ‘갈등전환’의 관점이다.

이제 원효의 ‘코끼리’를 정치적 상황에 적용해보자. 코끼리의 전모를 그려내기 위해서는 어느 한 주장도 제한되거나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 자유롭게 자신의 주장을 펼치되 다른 사람의 주장에도 귀를 기울일 때 점차 코끼리의 전모를 완성해갈 수 있다. 다만 코끼리 아닌 것을 코끼리라 우기거나 거짓 증언을 하는 사람은 구별되어야 할 것이다. 서로 모순되고 상충되는 주장들이 한자리에서 펼쳐지면서 어지럽고 혼란스럽기도 하겠지만, 이 ‘평화로운 다툼’의 과정을 통해서만 조금씩 코끼리의 전모에 다가갈 수 있다. 한 사회의 발전 또한 마찬가지다. 미래로 나아가는 방향과 방법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때론 갈등도 빚고 다툼도 있을 수 있지만 그 길만이 지속적 발전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길이다. 화쟁의 정치란 단 하나의 옳음이 아니라 복수의 옳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의 옳음’이 절대적일 수 없으며 ‘저들의 옳음’과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임으로써 함께 ‘더 큰 옳음’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정치를 말한다.

미국의 정치학자 엘머 에릭 샤프슈나이더(1892~1971)는 정당정치에 관한 그의 명저 <절반의 인민주권>에서 정치란 갈등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완화하거나 조절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서로 다른 의견이 공존하는 것, 갈등이 늘 상존하는 것이 정치가 작동하는 현실이며 정치가 필요한 현장이다. 샤프슈나이더 그리고 화쟁의 정치학에서 갈등은 그 자체가 문제적 상황이 아니다. 갈등의 상황은 오히려 각자만의 코끼리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온전한 코끼리’를 볼 수 있는 기회다. 갈등을 현안 해결과 더 큰 발전의 에너지로 만들어가는 일, 그것이 바로 정치의 역할이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생각하는 옳음을 실천하려는 도덕적 본성을 가지고 있다. 정의감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옳음만을 정의라고 집착하면서, 다른 사람의 옳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사회는 분열되고 대립과 갈등은 증폭될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갈등과 분쟁의 양상이 바로 그러하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옳음’을 관철하고 ‘저들의 그림’을 타도하려는 독선적 정의감이 아니다. ‘나의 옳음’과 ‘저들의 옳음’이 공존할 수 있고, 서로의 옳음이 어떻게 다른가를 살펴보는 개시개비의 화쟁적 성찰이다. 화쟁적 성찰이 전제되지 않는 정의의 실현은 가능하지 않다.

화쟁의 정치란 다툼이 없는 평화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다투되 평화롭게 다투는 것’, 그것이 바로 정치다.

10. 비정규직: 승자만이 아닌, 일하는 자 모두가 권리를 갖는 나라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

스크린도어(안전문)를 수리하던 열아홉살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인원이 부족한 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 안전매뉴얼은 종이쪼가리였다.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절차는 노동자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우는 도구가 되었을 뿐이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비용'으로 취급되고 존중과 권리가 사라진 시대이다. 국민소득 3만달러 운운하는 나라에서 월 200만원 이하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절반이나 되고, 일을 하다가 죽는 이들이 1년에 2천명이나 된다면 이것이 어떻게 정상일 수 있는가. 지금 사회는 노동자의 권리가 사라진 '비정규 사회'이다.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통해 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을 이루었다. 노동자들이 조직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었기에 이 사회에서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었다. 그런데 그 권리로부터 배제된 것이 바로 '비정규직'이다. 기업들은 1990년대 중반부터 비정규직을 활용했지만 그때만 해도 대다수 시민들은 비정규직을 예외적이고 지속되어서는 안 될 고용형태로 간주했다. 그런데 정부는 1998년 파견법, 2007년 기간제법을 시행함으로써 마치 비정규직이 정상적 고용형태인 것으로 만들려고 했다. '노동유연화는 세계적인 추세'라고 주장하면서 그 본질이 노동자의 권리 배제라는 점을 감추고자 했다.

비정규직 제도가 허용된 뒤 기업들은 신규채용을 줄이고 상시업무에 비정규직을 늘렸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권리를 주장하기 매우 어렵다. 기업 안에서 노동자는 약자인데, 언제라도 해고될 수 있다는 점은 비정규직을 더 약자로 만든다. 지난해 고용노동부 통계를 보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은 정규직 임금의 65.5%로 매우 낮는데, 그것은 정규직 임금이 높아서가 아니라 비정규직 임금이 너무 낮기 때문이다. 차별시정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차별시정을 신청할 경우 재계약되지 않기에 그 제도로부터도 소외되어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저임금과 차별은 '비정규직'이라는 현실로부터 나온다.

노동자들은 살아남기 위해 회사에 순응하게 되고, 기업들은 이 점을 이용하여 안전장치 대신 위험 업무를 비정규직들에게 떠넘기고, 성희롱과 인격적 모욕, 폭언과 폭행, 가학적 노무관리로 선회한다. 이로써 일터는 무권리의 공간이 된다. 집단적 힘으로 이런 현실을 바꾸고자 해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만들기 어렵다. 계약직은 노동조합을 만드는 순간 재계약이 안 될 수도 있으니 쉽게 나서지 못한다. 하청노동자들은 어렵게 노동조합을 만들어도 진짜 사장인 원청이 법적으로 사용자 책임을 지지 않으니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원청 사용주는 하청업체 폐업 등 부당노동행위도 마음대로 저지른다. 그래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2%대에 머물고 있다.

단지 일터에서만 권리에서 배제되는 것이 아니다. 저임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생존을 위해 장시간을 일하게 된다. 한국의 노동시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멕시코 다음으로 긴 것은 저임금 때문이다.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를 피폐하게 만들어 사회적 존재로서의 삶을 누리지 못하게 만든다. 문화생활을 누리고 정치와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공동체로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일은 꿈도 꾸지 못하게 된다. 고용형태가 복잡해지면 책임주체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불만이 있어도 누구를 향해 불만을 이야기해야 할지 알기 어렵다. 때로는 그것이 사회에 대한 막연한 불만이 되어 사회적 불안으로 전이된다.

비정규직 확산으로 기업은 비용을 절감하는 것 같지만 그 비용은 누군가에게 전이되는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66.7%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해고될 경우 친지에게 생계를 의탁하게 된다. 기업의 이윤을 위해 희생된 노동자들의 고통을 가족이 떠맡는다. 2013년 서울 성수역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사망한 노동자는 단순 변사로 처리되었고, 하청업체인 은성피에스디(PSD)만 30만원의 벌금을 물었다. 이후 구의역 참사를 통해 스크린도어 수리 노동자 사망의 책임이 서울메트로에 있음이 밝혀졌지만 그때 당시 원청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다. 기업이 아낀 비용은 노동자들의 죽음값이었던 셈이다. ‘비용’ 때문에 노동자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서울메트로가 승객들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길 리는 없다. 노동자의 위험은 승객의 위험으로 전이된다.

지금 노동은 고역이다. 경쟁사회는 계급사회가 되었고, 개인의 노력과 정진은 보상받지 못한다. 협업은 깨져 있고 노동자는 위계화되어 자존감을 잃고 있다.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삶은 황폐해진다. 이런 사회에 어떤 미래가 있는가? ‘기업의 발전’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나라는 이미 가치가 없다. 기업과 정부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통이 마치 정규직 노동자들의 책임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노동소득분배율은 날이 갈수록 떨어지고 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건도 하락하고 있다. 대기업의 ‘나홀로 성장’이 사회 전체를 고통에 빠뜨린다.

이제 우리 사회의 가치를 ‘이윤’에서 ‘권리’로 바꾸어야 한다. 노동자라면 어떤 권리를 누려야 하는지를 이야기해야 한다. 그리고 그 권리는 ‘누군가’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가 누려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그가 중요한 일을 하는지 아닌지, 핵심업무인지 아닌지에 따라 노동자를 나누고 차별을 정당화한다. 하지만 이 사회는 ‘필요한 일’인지 아닌지가 중요할 뿐이다. 필요한 일을 하는 모든 이들은 차별 없이 정당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사회적 원칙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그 권리는 경쟁을 통해 승리한 자의 전유물이 아니라, 일하는 자 모두의 집단적 권리여야 한다.

일하는 이들은 생활 가능한 임금을 받아야 하며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어야 한다. 노동자들은 함부로 해고되어서는 안 된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노동시간을 줄여야 하고, 유해·위험 업무에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일하지 못하게 될 때에는 생존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고용보험이 확대되고 실업부조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모든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데 집단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기업의 경영에 노동자와 시민사회가 참여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노동이 다른 이들과의 협업이 되고 노동자의 능력을 온전히 발휘하며, 미래의 비전을 갖고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다면 이 사회는 더 행복한 사회가 될 것이다.

비정규직 없는 세상은 모두가 정규직인 세상으로 협소해질 수 없다. 정규직이 되었다고 권리가 저절로 생기지는 않기 때문이다. 비정규직이 없는 세상은 모든 이의 노동이 존중되고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세상을 의미한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그런 사회를 만드는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가, 이렇게 하면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가를 묻는 이들이 있다. 그런데 문제는 ‘비용’이나 ‘발전’ 여부가 아니다.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가치를 재구성해보자는 것이다. 그 가치를 공유할 수 있다면 어떤 비용을 절감하고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 이 가치를 실현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

물론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기업의 지배력이 전 사회에 미쳐 있고 수많은 사람들은 경쟁과 차별과 배제에 익숙해져 있으며 절망감도 크다. 하지만 구의역에서 사망한 스크린도어 수리 노동자를 추모하며 많은 이들이 ‘네 잘못이 아니야’라고 말했다. 그렇다. 잘못은 이 사회가 한 것이다. 많은 이들이 비정규직 문제를 자신의 잘못이라고 여기지 않고 사회의 문제라고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추모를 통해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 작은 실천들이 한순간의 추모를 넘어 지속적인 실천이 될 때, 그리고 용기를 내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우리는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다. 우리에게는 더 많은 낙관과 용기가 필요하다.

11. 환경: 지속가능하고 '좋은 삶'이 가능한 민주공화국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내가 어릴 때에는 '미세먼지'라는 단어를 모르고 자랐다. 학교 운동장에서 뛰어놀다 보면 흙먼지가 일어날 때도 있었지만, 그 먼지는 자연 상태의 먼지였다. 요즘 문제가 되는 미세먼지처럼 화석연료 연소나 산업활동 등에서 발생하는 인공적인 먼지는 아니었다. 최근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이 검출되어 문제가 되고 있는 인조잔디니 우레탄이니 하는 것도 없었다. '기후변화'니 '지구온난화'니 하는 단어도 모르고 자랐다.

그런데 불과 30~40년 만에 세상은 완전히 바뀌었다. 얼마 전 미세먼지가 아주 심하던 날, 고등학생인 딸아이는 아침밥을 먹다가 '아빠, 나는 평생을 이 미세먼지와 함께 살아야 돼?' 라고 물었다. 할 말이 없었다.

단지 미세먼지만이 문제가 아니다. 주변 곳곳이 위험으로 가득 차 있다. 수많은 피해자를 낳은 가슴기 살균제 사건은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자본의 탐욕이 통제되지 않는 순간, 아무것도 안심할 수 없다.

이런데도 30년 전에 비해 지금 청소년들의 삶이 더 행복하다고 할 수 있을까? 마시는 공기조차도 안심할 수 없고, 뛰어노는 운동장에서도 중금속에 노출되는 삶을 만들어놓고, 기성세대라는 사람들이 청소년들에게 무슨 할 말이 있을 수 있나?

이 모든 문제들의 원인은 '자본의 탐욕'을 방임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정치·행정 시스템에 있다. 기업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소홀히 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일이다. 그것을 통제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정치이고 정부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정치·행정은 자본의 탐욕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업의 이윤을 보장하기 위한 수족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제도를 허술하게 만들고, 그나마의 제도도 부실하게 운영한다. 아무리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지만,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최소한의 임무도 다하지 못하는 국가를 '국가'라고 부를 수 있을까? 지금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자본공화국일 뿐이다.

게다가 앞으로의 일을 생각하면 마음이 더 어두워진다. 대한민국은 '지속가능성'의 측면에서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5월16일 미국 예일대와 컬럼비아대 공동연구진은 전 세계 국가들을 비교한 '환경성과지수'(EPI: 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를 발표했다. 이 발표의 내용을 보면, 대한민국은 공기질 부문에서 전체 조사 대상 180개국 중 173위였다. 호흡을 통해 사람의 폐까지 곧바로 침투하는 초미세먼지(PM2.5) 같은 항목이 매우 심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가 뒤늦게 내놓은 대책은 미흡하기 짝이 없다.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방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해서는 낡은 것만 일부 폐쇄한다는 정

도이다. 20개나 더 건설 예정인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해서는 그냥 놔두겠다는 것이다. 대기업들이 짓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를 중단시킬 엄두도 내지 못하는 것이다.

원전 문제도 점점 더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났을 당시에 21개였던 대한민국의 원전 개수는 곧 26기로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미국의 스리마일, 소련의 체르노빌, 일본의 후쿠시마로 이어진 원전 사고의 재앙은 아직도 수습되지 않고 있다. 후쿠시마 주변의 아동들은 일본의 다른 지역 아동들에 비해 갑상선암 발병률이 몇십배에 달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세계 모든 나라들이 대한민국처럼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에 의존하는 것은 아니다. 이미 전 세계는 재생가능에너지로 전환하고 있다. 심지어 지금 우리에게 민폐를 끼치고 있는 중국마저도 원전과 석탄화력 발전을 미래의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 중국은 재생가능에너지에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국가이다. 이미 중국에서는 재생가능에너지로 생산하는 전력량이 원전에서 생산하는 전력량을 넘어섰다.

끊임없이 벌어지는 토건사업도 마찬가지이다. 얼마 전 논란이 되었던 영남권 신공항은 백지화되고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일부 정치인들이 ‘새만금 신공항’을 거론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지금도 적자를 내는 지방 공항들이 수두룩한데, ‘신공항’ 운운하는 것은 개발심리를 부추겨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뿐만이 아니다. 전 국토가 거미줄 같은 고속도로, 국도로 뒤덮이고 있다. 시민들이 주유소에서 휘발유, 경유를 넣을 때 내는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이런 도로 건설에 낭비되고 있다. 요즘에는 민자도로 형식으로 건설되는 것들이 많지만, 결국 세금이 투입되고 있다. 수익을 보장해주거나 토지매입비 등 여러 명목으로 지원을 해주기 때문이다.

이런 토건사업으로 인한 이익도 결국 대형 건설자본에 돌아갈 뿐이다. 건설경기는 일시적일 뿐, 환경을 파괴하고 예산을 낭비한다. 이런 토건국가 구조에서 벗어나야 하지만, 현재의 지역구 중심의 선거제도에서 국회의원들은 ‘자기 지역 토건사업 챙기기’에 몰두한다. 대통령 선거 때에도 후보들은 지역토건 공약을 내세워서 표를 얻으려 한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토건공화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들의 삶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소중한 국가예산이 엉뚱한 곳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제는 콘크리트가 아니라 사람에게 돈을 써야 한다. 그것이 환경 파괴를 막는 길이기도 하다.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은 먹고사는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기도 하다.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지만, 재생가능에너지와 관련된 일자리는 앞으로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독일은 이미 재생가능에너지를 통해 36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어낸 경험이 있다. 그래서 ‘녹색이 일자리’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 또한 기본소득 같은 새로운 대안도 지속가능한 사회에 맞는 먹고사는 방식이다. 최소한의 소득이 보장되고, 그 소득을 바탕으로 사람들이 ‘다른 삶’의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어야 한다. 재원에 대한 걱정을 하지만, 조세개혁을

하고 토건사업에 낭비되는 예산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돌리면, 재원은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

사실 대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대안이 채택되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 이미 세계 곳곳에서 대안이 만들어지고 있다. 원전을 줄여나가고 있고,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에너지, 교통, 먹거리 등이 바뀌고 있다. 기본소득 같은 대안도 세계 곳곳에서 실험이 이뤄지고 있다. 미국 알래스카주에서는 35년째 모든 주민들에게 주민배당금을 지급하고 있다. 핀란드는 국가 차원에서 기본소득을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런 변화들은 모두 민주주의를 통해 채택된 것들이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같은 국가들은 국민투표를 통해 원전을 폐쇄하기로 했다. 좋은 선거제도를 통해 녹색당 같은 새로운 정당이 국회로 진출하여 변화를 만들어낸 독일 같은 사례도 있다.

그러나 유독 대한민국은 이런 흐름에서 비껴나 있다. 정치가 ‘자본’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고, 대기업과 일부 자산계층의 입맛에 맞는 정책들만 편다. 시민들은 투표를 할 때에만 주권자로 대우받을 뿐, 그 외의 시간 동안에는 철저하게 ‘통치의 대상’으로 취급당하고 있다.

결국 문제를 바로잡을 방법은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는 길밖에 없다.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지속가능한 사회도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의 개혁도 필요하고, 새로운 정치세력이 만들어지는 것도 필요하다. 특히 87년 민주화운동 이후 30년이 되어 가는 지금 시점에서 국가 시스템의 개혁이 정말 중요하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되려면, 시민들이 직접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국민발안, 국민투표, 국민소환과 같은 직접민주주의가 도입되어야 한다. 선거제도를 전면 개혁하여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수가 배분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 지역에서의 창의적 시도를 가로막는 중앙집권적 국가구조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쳐 분권화된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 경제·정치 전반에 퍼져 있는 특권구조를 깨야 한다. 이런 변화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12. 지방: '지방'의 딜레마와 '지역감정'을 넘어서는 나라

김용규 (부산대 영어영문학과 교수)

팔레스타인 출신 미국 문학비평가인 에드워드 사이드는 <문화와 제국주의>에서 미국인들이 미국 밖의 다른 나라 사람들의 삶에 얼마나 무지한가를 비판한 적이 있다. 그는 미국인들이 자신의 정부가 아프리카, 인도차이나, 라틴아메리카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보다는 야구, 농구와 같은 스포츠에 훨씬 더 정통하다고 말한다. 다소 농담 섞인 얘기겠지만 여기서 사이드가 비판하고자 한 점은 미국인들이 갖고 있는 '중심의 맹목적 무지', 즉 그들에게 세계란 곧 '미국'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 남의 나라 일만은 아니다. 미국보다 훨씬 작은 대한민국에서도 세계는 서울과 서울 아닌 것으로 나뉘어 있기는 마찬가지다. 한국에선 서울 바깥의 지역이 모두 '지방'으로 불린다. 그리고 지방은 근대적 발전에서 뒤처진 후진성, 문화적 역동성에 대립하는 편협성, 보편적 문화에 반하는 특수적인 주변성의 장으로 인식된다. 정치, 경제, 행정, 교육, 문화 등 거의 전 분야에서 서울 및 수도권 집중 현상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오늘날 이런 인식은 더욱더 고착되고 있다. 강준만은 오늘날 서울과 지방 간 사회문화적 격차가 일제강점기의 동경과 경성 간 관계와 너무나 비슷해 깜짝 놀랄 지경이라고까지 말하기도 했다.

이런 현실에서 지역 문제는 중앙과의 노골적 대립관계를 형성하지 않는 한 잘 드러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설령 드러난다 하더라도 지역의 주장들은 소외와 패배감에서 생긴 지역적 불만, 혹은 뒤뜰린 지역감정 정도로 폄훼되기 쉽다. 하지만 이런 반응은 담론적 대화와 재현의 차원에서 지역이 중앙과의 관계에서 늘 불리한 입장에 있음을 잘 보여준다.

현재 한국 사회의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는 사드 배치 문제도 그것이 왜 지역의 생존에 직결된 문제인지, 그것이 지역의 삶에 어떤 근본적 변화를 낳게 될지 하는 지역의 관점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고 있다. 지역 사람의 생존과 고뇌는 국가주의적 전략에 묻혀버리거나 중앙의 미디어시스템을 통해 사라지고 만다. 지역은 항상 계도와 설득의 대상일 뿐 삶을 스스로 결정하는 주체로 간주되지 않는 것이다.

민주주의란 단순히 법적, 형식적 주권의 문제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민주주의의 실현은 우리가 어디에 살든 우리 삶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고 있는가, 나아가서 우리 스스로 자신의 삶의 방향성을 결정할 권리를 갖고 있는가 하는 문제에 달렸다. 그렇게 보면 지역에서 민주주의 실현은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하지만 역으로 지역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은 우리가 살아야 할 나라, 즉 한국의 미래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될 수 있다.

왜 그럴까? 지역 문제의 근원에 한국 사회의 반민주적 모순구조, 즉 지역에서의 삶의 자율성을 침해하면서 지역 간 격차를 재생산하고 이용하는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그 구조는 지역 차원에서의 정치의식과 민주주의의 성숙을 차단하고 있다.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전후하여 지역주의를 만들어진 현실로 보려는 견해와 지역모순을 강조하면서

특정 지역의 신성화에 맞서 세속화를 주장하는 견해 등 지역에 대한 본격적 논의들이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그런 논의들에서 지역감정을 정치주의적 입장에서 이해하거나 한국 사회에서 '지역'이라는 조건이 갖는 공통적 이해는 간과되는 경향이 있다.

지역감정을 통해 한국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존재와 구조의 상호작용 속에서 주체의 아비투스(a)가 형성되듯이, 감정은 모호해 보여도 구조 속에서 인간이 감각적으로 형성한 결정체다. 감정을 이해하려면 구조적 조건을 볼 필요가 있다. 지역문제의 발생 원인을 역사적으로 먼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찾으려는 시도들도 있지만 보다 가까운 과거, 즉 1960년대 이후 개발독재와 그것이 추구한 경제개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영향이 우리 자신에게 더 직접적이기 때문에 지역감정의 분석과는 무관해 보이지만 한국 사회 전체는 물론이고 그 내부에까지 지대한 변화를 가져왔다.

부산의 경우 1960년대에서 1970년대 중반까지 역사상 최고의 경제적 호황을 누렸다. 농촌에서 이주해 온 값싼 노동력을 기반으로 부산 경제는 높은 생산증가율과 부가가치를 통해 급속한 발전과 성장을 이룩하였다. 이 시기에 부산으로의 인구 유입도 서울 다음으로 급증하여 연평균 7%를 넘는 인구증가율을 보였다. 부산은 해방 후 인구 40만명, 한국전쟁기 88만명, 65년 150만명, 72년 200만명, 75년에는 250만명에 이르는 거대도시로 성장한다. 이 시기 부산의 제조업 부가가치는 전국비중 22.3%를 기록하는 등 최고 전성기를 누렸다.

하지만 이런 유례없는 압축성장의 이면에 독특한 정치경제적 현상이 동시에 일어났다. 지역은 성장 과정에서 중앙으로 급속하게 통합되어가는, 즉 성장과 종속의 이중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한국 경제가 세계 경제 속으로 편입되면서 지역들 또한 국가 주도 경제개발에 의해 특성화 중심으로 편성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 결과 기획, 설계, 관리, 경영 등의 행정관리 및 계획 기능은 수도권에 집중되는 데 반해, 지역은 중앙의 기획과 통제 아래 실행만 담당하는 특정 산업 중심의 생산지 혹은 원료공급지로 배치되었던 것이다. 이런 성장 속의 종속, 이른바 '발전적 종속'으로 인해 지역은 자율적 재생산 구조를 잃고 외부로부터 강제된 특화된 기능만 떠맡게 된다.

사실 이와 같은 과정이 제대로 의식되지 못했던 것은 종속 과정 자체가 곧 성장과 발전의 과정이었기 때문이다. 발전 속에 있었기에 종속은 별다른 저항감 없이 받아들여졌던 것이다. 하지만 성장 속 종속에서 성장이 멈춘 후는 어떻게 될까? 특성화된 지역경제로 인해 지역은 지속적으로 경기부침 현상을 겪게 되고, 국가의 혜택을 둘러싼 지역 간 경쟁과 갈등은 더욱 치열해진다. 치열한 경쟁과 지속적인 위기 때문에 지역 내에 개발과 발전을 열망하는 근대주의적 욕망은 더 강력하게 작동한다.

이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과의 경쟁의식 때문에 타 지역에 대한 선망과 원망이 뒤섞인 독특한 감정이 형성되기 시작한다. 자신의 지역에선 박탈된 기회가 다른 지역에 더 많이 주어졌다고 상상하는, 즉 다른 지역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린다고 상상하는 욕망이 구성된다. 이런 구조 속에서 지역들은 공생과 연대가 아니라 경쟁의 관계로만 존재한다.

한국 사회에서 지역감정은 비교적 최근에 형성된 근대주의적 산물이다. 지역감정은 선거 승

리를 위해 정치가들이 이용하려고 만든 현실이기도 하지만 그 뿌리는 더 깊은 곳에 있다. 실제 지역정치가들이 이용하고자 한 것은 바로 이런 양가적 지역감정이다. 어느 순간부터 지역에서 위대한 정치란 지역감정의 형성 조건을 근본적으로 문제 삼으면서 시민들과 함께 지역의 자율적 삶을 튼튼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감정을 교묘히 이용하면서 중앙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획득해왔다고 떠들어대는 정치가 된 것이다.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지역감정은 유사한 구조를 띠고 있다. 최근 신공항 유치를 두고 영남권 내부에서 벌어진 지역갈등이 이를 잘 보여준다. 아이엠에프(IMF) 구제금융 사태 이후 거의 모든 지역의 경제적 전망은 암담한 상황이다. 경남이든 경북이든 부산이든 대구든 부실기업의 퇴출과 기존 특화된 산업의 급격한 쇠락을 겪으면서 인재들이 대거 빠져나가고 있다. 이런 상황이기에 신공항 유치는 두 지역 모두가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블루오션이었다.

한국의 지역주의는 이런 구조 때문에 보수와 진보 사이를 끊임없이 동요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보수적이거나 진보적인 것이 아니라, 보수적이면서 동시에 진보적이다. 자율성을 상실한 지역주의란 전망이 현실이 될 때 보수적이 되었다가 원망이 쌓일 때 진보적이 되는 역설적 이중성을 띠게 된다.

지역문제는 결코 간단히 볼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고 싶은 나라의 실현을 가로막는 중대한 장애가 될 수 있다. 지역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선 한국 민주주의의 온전한 실현 또한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중심/주변의 불평등한 구조와 그로 인해 만들어진 지역감정을 해체하고 지역적 삶 자체의 자율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한국처럼 정치경제가 중앙집중화된 구조에선 문화 또한 동질화되고 획일화된다. 이런 구조에선 역동적이고 창조적인 문화가 탄생할 수 없다. 다양한 문화들이 가로지르고 섞이고 융합하는 문화적 생태계 속에서 새로운 문화는 형성될 수 있다. 단순히 권리를 분점하는 지방분권을 넘어서 지역문화와 삶의 자율성과 민주화를 촉진하고 지역 간 연대를 강화하는 문화생태계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 지역 민주주의 없이 한국의 민주주의는 완성될 수 없다.

13. 여성: 불의에 맞서는 '공통 감각' 가지는 나라

류은숙 (인권연구소 '창' 활동가)

이 시리즈의 주제는 '우리가 살고 싶은 나라'다. 청탁을 받은 순간, 목에 탁 걸린 말이 '우리'이다. 여기서 '우리'는 누구일까? 나는 과연 '우리'에 포함될까? 정권과 불화하는 인권운동을 하고, 비혼에, 중년에, 돈도 없다. '포함'되는 데 걸릴 목록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하지만 이런 항목들은 주류 질서와 다른 대안을 구상할 수 있는 자원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여성'이라는 점도 다른 삶을 만드는 밑거름이 될 수 있을까?

대개 사람들이 대놓고 반대 못 하는 보편적 인권관에 따르면, 앞의 질문에 대한 답은 아주 간단하다. '우리'는 사상, 나이, 경제력, 성별, 지역, 출신 등에 상관없이 대한민국이란 정치공동체와 관계 맺는 모든 사람이어야 한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치 있는 존재이며 누구나 그런 존재로서 존중받아야 한다.' '정치공동체는 인간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제1 과제로 삼아야 한다.' 아직 충분히 실현되지 않은 이 선언은 그러나 '우리가 살고 싶은 나라'를 실천하는 데 무엇보다 중요한 전제이며 인권의 존재 의의다.

요즘 같은 세상에선 정치적인 입장을 떠나 누구라도 대놓고 공식적으로 '인권'을 부인하거나 반대하진 못할 것이다. '인권'이 명목상이나마 받아들여지는 세상에서 권리를 요구하는 건 결코 구차한 일이 아니며, '동등한 인간으로서 존중해달라'는 요구도 비참함이란 양념을 굳이 필요로 하지 않는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금언처럼 말이다. 더욱이, 가장 불리하거나 취약한 이들의 편에 서는 것이야말로 인권의 실천윤리이다.

그러나 무난하게 '인권'을 옹호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다. 가령 뿌리 깊은 모순임에도 요즘 새삼 불거진 듯 보이는 '여성 혐오'와 관련된 논란에서처럼 권리나 존엄을 부르짖는 사람이 여성이라고 가정해보자. 그 사람은 자신의 권리를 말할 때 폭력을 우려하거나 구차한 감정을 느끼는 등 상당히 혼란스러운 논란에 휩싸이기 십상이다. 부러 궁상떠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여성의 권리 상황이 실제로 나쁜데도 그런 사실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다. 여성의 열악한 경제적·사회적 지위, 긴 그림자를 드리운 성차별의 역사, 여성에 대한 폭력 사건들을 아무리 얘기해도 '그것으론 부족하다'거나 '사실이 아니다'라는 의심과 부인에 맞닥뜨리는 수가 많다. '설명'을 요구하는 일이 너무 많아지는 것이다. 흔히 인권침해를 부인할 때 나타나는 공통된 형태들이 있다. 엄연한 인권침해를 없는 듯 취급하기,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기, 그리고 간혹 인권침해의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그 의미를 축소하거나 왜곡하기이다. 하나같이 여성인권침해를 부인하는 현상에 들어맞는다. 이런 '부인'에 동원되는 흔한 말이 '안 그런 여성(남성)도 있다'는 것이다. 이런 말들은 드러난 사회적 사실들을 덮으려 할 뿐 아니라 구조적 모순에서 개인적으로 탈출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가운데 나오는 것이 상당수다. 인권침해는 개별적인 가해자와 피해자 구도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배후에 뿌리 깊은 역사와 맥락과 조건을 포함한다. 물론 문제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 개인이 더 많을 수는 있다. 하지만 그렇게 '안 그런 개인'을 굳이 '여성' 또는 '남성'으로 호출하고야 마는 것이 성차별이다.

여성이 권리를 주장할 때 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인식한 것이 현실이다. ‘인권은 공감을 발동으로, 연대를 동력으로 움직인다’고들 한다. ‘공감’은 불의한 일에 대한 공분을 포함한다. ‘생명, 자유, 안전’은 모든 인권규범의 앞머리에 나오는 인권 중의 인권이다. 국제인권규범에서는 ‘절대불가침’의 인권이라 표현한다. 이걸 위협당하면 정말 ‘긴급’한 것이고, 이에 대한 침해에 대해서는 본능적인 공분이 일어날 수 있다. 사람에게서는 그런 ‘공분의 역량’이 있다는 게 인권의 믿음이다. 특히 생명과 신체적 안전의 유린, 일상을 위협하는 폭력 등에 대한 타전에는 즉각 응답해야 한다. 응답의 내용은 당연히 고통의 해소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꾸물거리며 즉답을 안 할뿐더러 조롱과 더 위협적인 공포를 조성해 응대하는 일이 벌어져왔다.

사실 인권의 역사에서 완벽하게 준비된 ‘순결한 피해자’ 같은 건 없었다. 피해자를 되레 악마화하고 사회악이나 불순물로 왜곡·폄하하는 때가 많았다. 이에 맞선 ‘공분의 감수성’과 ‘인간 평등 사상’이 인권 진보의 동력이었다. 동등한 가치의 존엄한 인간에게 가해지는 비난, 모욕, 위협, 공격을 막아내며 부당한 고통을 허용하지 못하도록 함께 맞서는 일이었다.

인권침해를 부인할 때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또 하나가, 피해자가 호의를 베풀어달라는 호소는 받아주되 권리를 요구할 때 불편해하거나 껄뻘해하는 반응이다.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에게 베푸는 ‘특전’은 수혜자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언제든 시혜자가 철회하거나 훼손해 사달이 날 수 있는 것이다. 인권 투쟁의 소중함은 더 많은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얻어내거나 법·제도 등을 바꾸는 데만 머물지 않는다. 법·제도의 변화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다른 차원의 성취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것은 ‘존중’과 ‘자력화’이다. 내가 ‘주체’임을 자각하고 요구할 줄 아는 것과 우월한 위치에서 베푸는 것, 이것이 권리와 시혜의 핵심적인 차이이다. 아무리 힘이 약해도 아무리 열악한 처지에 있어도 인간으로서 당당히 요구할 자격이 나에게 있다는 권리 의식에 눈뜬 사람은 그 자체로 존엄하다. 호의는 베풀 수 있어도 권리는 인정하기 싫은 이들은 그런 ‘자력화’를 제일 두려워한다.

혐오란 일종의 두려움에서 생긴다. 위계에서의 우월함을 잃고 기존에 누리던 권력을 휘두르지 못하게 될까봐 상대방의 자력화를 방해할 때도 혐오를 이용하게 된다. 피억압자의 요구가 정당하고 강력할 때, 억압 세력은 호의와 아량으로 매듭짓기를 원한다. 하지만 ‘자력화’를 요구하는 쪽에서는 자신의 역량으로 실현할 수 있는 권리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을 받아들이라는 강요를 참을 수가 없다. 그런 강요는 겉보기에 ‘정상적’으로 보이는 체계 및 관계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고, 자력화된 사람들은 지금 상태에서 나눠 갖기가 아니라 배분을 결정하는 권력 자체를 바꾸려고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사회운동에서도 여성의 감정노동이 요구되고 전가된다. 대개의 삶이 힘든 상황 이듯 운동사회의 조건도 정말 ‘빡세다’. 모자란 자원을 쥐어짜며 ‘희생과 도덕성, 대의명분에 대한 헌신, 선도적인 활동에 대한 자부심’ 등을 강조하지만, 비판에는 취약하다. 고귀한 무언가에 ‘흠집’이나 ‘훼손’을 낸다며 반응하기 쉽다. ‘안 그래도 힘든데 너(너희들)마저 이럴 거야?’ ‘우리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거야?’ ‘다른 말’을 들을 여유가 없다. 대표적인 ‘다른 말’은 운동 사회 내의 위계와 성 역할에 대한 지적이다. 사람 사이에도 위계가 있지만, 고통과

그 고통을 의제화하는 데도 위계가 있다. ‘누구나’ 힘들다는 말로 ‘더’ 힘든 누군가의 고통을 침묵시키려 든다. ‘누구나’의 고통을 위로한 다음에야 ‘다른’ 성격의 고통을 얘기할 자격이 있다고 한다. 여기서 ‘누구나’는 흔히 억압받는 민중 등으로 표현된다. ‘다른’ 고통을 말하는 쪽은 위로의 노동을 하고 나서야 자기 고통을 말할 자격을 얻을 수 있고, 운동 내부의 권력 관계에 저항하면서도 부드럽게 말하고 상대방을 살피는 감성노동을 계속해야 한다. ‘사소한’ 일로 ‘중대한’ 투쟁에 발목 잡는다고 눈치받고 미움받는 역할을 감내해야 한다.

사회 운동은 기업제일주의나 공권력의 전횡, 경제성장 제일주의와 낙수 효과, 소위 사회평 균치를 극대화한다는 선전 등에 맞서왔다. 이른바 ‘여론’으로 포장된 공격들, 가령 ‘이제 그만해라’ ‘발목 잡는다’ ‘피곤하다’는 소리에 주눅 들지 않고 저항을 계속해왔다. 내부로 눈을 돌려보자. 같은 내용의 말을 누가 주로 들어왔는지. 성차별주의와 관행을 비판하는 소리는 여기에 덧붙여 ‘운동 망친다’는 소리까지 들어야 한다. 질문의 폐쇄, 선제 방어, 어정쩡한 사 후 수습, 어느 것도 ‘진보’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인간 존엄성 침해의 근본 원인인 심층적 조건과 환경을 다루고 맞서는 것이 진보라 한다. 근본에 대한 질문을 더 많이 깊게 나눠야 하지 않을까?

“여기서 나가자!” 할리우드 영화에서 자주 쓰인 대사라 한다. 마찬가지로 말을 하고 싶다. 차별하는 구조가 아니라 차별받는 사람이랑 싸우는, ‘여기서’ 나가자. ‘우리’가 공통감과 공 분으로 맞서야 할 불의는 차고 넘친다. 그런데 그 ‘우리’를 재구성하는 일 자체를 외면할 때 도대체 어떤 우리가 어떤 불의를 대면할 수 있을까.

14. 맺음말: 을의 민주주의를 위하여

진태원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인문한국 연구교수)

연재를 마무리하며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이하 '민연'으로 약칭)과 한겨레신문이 지난 1월22일 시작한 공동 기획 '우리가 살고 싶은 나라' 연재가 이 글로써 일단락된다. 이는 물론 '우리가 살고 싶은 나라' 기획의 종결이 아니라, 그 기획의 좀 더 심화된 구체적인 진전을 위해 한 가지 매듭을 짓는 것을 뜻한다.

연재 기간 동안 한국 사회의 주요 지식인들과 활동가들이 현재 한국 사회가 직면해 있는 위기의 핵심에 관해 짚어주었고, 또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여러 가지 해법을 제안해주었다. 이번 연재에 수록된 글들을 숙독한다면, 한국 사회의 주요 문제점이 무엇이고 또 이에 대해 어떤 대응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가에 관해 풍부하고 유익한 통찰을 얻을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연재를 마무리하면서 '을(乙)의 민주주의'라는 화두를 제기해보고 싶다. 우선 연재된 글들에서 나타난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자면 첫째, 연재에 참여한 필자들은 현재 한국 사회가 직면한 위기가 일시적이거나 표층적인 현상이 아니라, 개항 이후 또는 적어도 해방 이후 한국 현대사의 누적된 문제점들이 중층적으로 표출된 결과라고 지적하고 있다. 경제적 불평등, 복지 체계의 결여, 정치적 갈등 구조의 왜곡, 종속적인 한-미 관계와 연동된 적대적인 남북 관계, 사회적 관계의 신자유주의적 재구성, 국가 폭력과 대기업 지배 사회, 이윤 중심의 도시 질서, 패거리들끼리의 쟁투로 전락한 정치, 노동자를 일회용 인간으로 전락시키는 비정규직 체제, 반민주적 사회 질서의 거울로서 서울-지방 관계, 여성 혐오에서 표출되는 한국 사회의 반인권적 현실 등은 모두 뿌리 깊고 다면적인 지배 구조의 표현들이다.

둘째, 따라서 이러한 위기에 대한 해법은, 적어도 원칙적으로는 한국 사회의 전면적인 변화와 개조를 지향하는 데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 필자들의 공통된 문제의식이다. 아울러 필자들은 이러한 근본적인 개조의 방향은 위로부터의 개혁이나 정책적 대안 마련 이전에 아래로부터의 주체적 노력에서 찾아야 한다는 인식도 공유하고 있다. 그것은 기성세대와 다른 젊은 세대에 대한 호소로 나타나기도 하고, 약자들의 사회력에 기반을 둔 연성권력, 새로운 사회주의에 대한 모색, 국가 및 재벌 권력을 민주적으로 규율해야 할 필요성, 시민의 도시에 대한 권리의 실현, 노동자들의 연대에 기초를 둔 우리 사회의 가치 재구성, 인권에 대한 공감력의 증대 같은 요구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이 연재를 읽으면서 독자들은 연재에 참여한 필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이러한 공통적인 지향 이외에도,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관점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느꼈을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우선 상이한 주제에서 생겨나는 차이라고 할 수 있다. 복지라는 주제로 접근하는 필자와 여성·인권의 문제를 생각하는 필자, 서울-지방 관계에 주목하는 필자가 한국

사회의 문제점에 대해 상이한 진단을 내놓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차이는 또한 정치적 관점의 차이에서 생겨날 수도 있다. 사회주의를 새롭게 정치의 지평에 끌어들이야 한다고 보는 관점과 사회력에 기반을 둔 연성 정치를 추구하는 관점, 통치 개념에 입각하여 시민사회와 국제관계를 바라보는 입장, 그리고 화쟁의 정치를 요구하는 관점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나는 이러한 차이점들을 최소화하거나 부인하기보다 이것들을 그 자체로 인정하고, 이러한 조건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형성될 수 있는지, '우리가 살고 싶은 나라'를 구성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사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현대 사회의 조건을 고려할 때 정치 공동체를 구성하는 주체인 '우리'는 다원적이고 갈등적인 우리일 수밖에 없으며, '우리가 살고 싶은 나라'는 이러한 갈등적인 복합체로 구현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을의 민주주의'라는 화두는 바로 이러한 현실적 조건에서 출발한다.

계약 관계에서 두 당사자 중 하나를 가리키거나 아니면 갑, 을, 병, 정 등과 같은 순서를 표현하던 용어였던 을이라는 단어가 사회적 약자, 몫 없는 이들 일반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을'이라는 용어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이것이 학자나 전문가들이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것은 자신들이 갑에 의해 모욕당하고, 착취당하고, 부당하게 취급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익명의 을들이 스스로 이 사회의 불평등한 구조와 불공정한 질서를 고발하기 위해 창안해낸 말이다. 따라서 을이라는 이 용어야말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복합적인 모순을 이해하고 개념화하기 위한 적절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을이라는 이 새로운 사회적 용어가 시사하는 것은 무엇일까? 첫째, 을이라는 말은 이 사회에는 동료 시민들에게 지배되거나 모욕당하거나 무시당하는 이들이 존재한다는 것, 더욱이 그들이 다수를 이룬다는 것을 말해준다. 사실 을이라는 말이 광범위한 반향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을의 위치에 놓인 사람들이 확산되고 있다는 뜻이다. 보편적 평등의 원리에 입각해 있는 민주주의의 이념에 비춰 보면, 이는 한국 사회가 더 이상 민주주의적 사회가 아니든가 아니면 적어도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왜곡되거나 훼손된 사회라는 것을 말해준다.

현대 철학의 개념을 사용한다면 을은 '내적 배제'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내적 배제라는 개념이 뜻하는 것은 어떤 공동체 내부로 온전히 통합되지 못하지만 또한 그 공동체 바깥으로 완전히 배제되지도 않는 집단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공동체 안에 존재하되 그 공동체 안에서 온전한 성원으로 존재하지 못하는 집단, 곧 때로는 개체지로 희화화되는 '이등 국민', 이등 시민이 바로 내적 배제의 대상이다. 을이라는 말보다 이러한 내적 배제 개념을 우리말로 잘 표현하는 단어는 없을 것이다.

둘째, 갑에 의해 억압되고 착취받고 무시당함에도 불구하고, 을들은 단일하거나 동질적인 집단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을이라고 부르는 개인들과 집단들 사이에는 또 다른 불평등 및 지배 관계가 존재한다. 을 아래에는 병(丙)이 있고, 병 아래에는 정(丁)이 있으며, 을은 자신이 갑에게 당하는 것 못지않게 병 위에 군림하며, 병은 또 다른 자신의 을들을 거

느리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갈등과 정치적 투쟁은 20 대 80이나 1 대 99, 또는 갑과 을 사이에서만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을들 사이의 투쟁으로도 나타난다. 그것은 아버지와 자식 간의 갈등이고, 동료 노동자들 간의 투쟁이며, 남성과 여성 간의 투쟁이고, 서울 사람과 지방 사람의 반목이다. 조세희의 표현을 빌린다면 ‘난장이들 간의 투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만약 우리가 살고 싶은 나라를 구성해야 하는 주체가 사회적 약자들, 다수의 을이라면, 이러한 주체는 매우 문제적인 주체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문제적인 이유는, 을들 사이에는 선형적인 연대가 존재하지 않으며, ‘우리 함께 연대합시다!’, ‘민중이여, 단결하라!’라는 구호를 통해 그들 사이에 존재하는 갈등이 해소되지도 않기 때문이다. 가령 복지국가의 건설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사람이 때로는 여성 혐오의 주체일 수 있으며, 아니면 적어도 그것을 사소한 문제로 치부할 수 있다. 또는 비정규직 철폐에 앞장서는 사람이 종속적인 한-미 관계에 대해서는 맹목적일 수도 있으며, 진보 도시에 관심이 많은 사람도 서울과 지방 사이의 지배 관계에 대해서는 둔감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살고 싶은 나라가 을의 민주주의, 을이 주체가 되는 정치 공동체를 의미한다면, 이러한 정치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근본적인 과제는 갑과 을 사이에 존재하는 강고한 지배구조를 해체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러한 지배구조를 지탱하고 또한 확산하는 매개체로서 을들 사이의 반목적 갈등 관계를 어떻게 화쟁의 연대 관계로 전환시킬 수 있는가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을의 민주주의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을이 지배자가 아닌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주인이 아닌 (따라서 또 다른 하인이나 노예를 전제하지 않는)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다. 이러한 을의 민주주의는, 빈민을 빈민이 아니라 ‘데모스’(Demos, 민중)나 시민으로 만들어주며, 재벌이나 대통령, 국회의원도 하나의 데모스로, 시민으로 만들어주는 그러한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이라는 정치 공동체가 더 이상 ‘그들의 국가’, 치안 기계인 국가로 작동하지 않게 하려면 이러한 을들이 주체가 되는 민주주의가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지 숙고해볼 필요가 있다.